

第289回國會 教育科學技術委員會會議錄 第 1 號
(臨時會)

國會事務處

日 時 2010年4月2日(金)
場 所 教育科學技術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현안보고
 - 가. 일본교과서 독도영토표기 관련
 - 나. 교육계 비리관련
 - 다. EBS강좌 수능출제 관련
2. 일본의 사회교과서 독도 영토표기 검정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3. 200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審査된案件

- | | |
|---|----|
| 1. 현안보고 | 1 |
| 가. 일본교과서 독도영토표기 관련 | |
| 나. 교육계 비리관련 | |
| 다. EBS강좌 수능출제 관련 | |
| ○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 10 |
| 2. 일본의 사회교과서 독도 영토표기 검정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 10 |
| 3. 200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11 |
| 1. 현안보고(계속) | 11 |
| 가. 일본교과서 독도영토표기 관련 | |
| 나. 교육계 비리관련 | |
| 다. EBS강좌 수능출제 관련 | |
| 2. 일본의 사회교과서 독도 영토표기 검정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계속) | 11 |

(10시37분 개의)

○위원장 이종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국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김대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걸 다음은 이번 사무처 인사이동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우 입법조사관입니다.

손을춘 입법조사관입니다.

조재분 사무원입니다.

강현순 사무원입니다.

(직원 인사)

1. 현안보고

가. 일본교과서 독도영토표기 관련

나. 교육계 비리관련

다. EBS강좌 수능출제 관련

(10시39분)

○위원장 이종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일본 초등학교

교 교과서에 독도영유권 표기 문제, 그동안 많은 국민과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교육계의 비리 문제, 그리고 EBS방송강의 수능 출제가 과연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등에 관해서 일련의 현안보고 문제를 관련 교과부로부터 직접 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향후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현안보고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위원장과 양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오늘 회의가 마련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현안보고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병만 장관께서 요르단 연구용원자로 건설사업의 계약식 참석 때문에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출장 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출석하지 못하고 이주호 교육부차관께서 대리출석 하셨습니다. 이 점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통해서 현안보고를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하여 동북아역사재단 정재정 이사장님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주호 차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현안보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걸** 잠깐만요, 김영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민주당의 김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산적한 현안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교육 관련 비리문제, 이 문제는 어떤 현안보다도 더 시급하고 또 처방을 해야 될 현안과제입니다. 오늘 우리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현안보고 중에 교육비리를 현안으로 잡고 논하게 된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작년 1년 동안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문제에 대해서 속기록에도 검증을 해 보시면 근거가 나올 것입니다마는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공정택 교육감 관련 문제, 최근에 벌어진 관권선거, 그리고 교육비리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공

정택 교육감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상임위 열릴 때마다 해 왔습니다. ‘진상조사를 하자, 적어도 주무 상임위원회로서는 우리 교육계에 만연하고 있는 현안과 비리, 사학비리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절대로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할 때마다 위원장께서는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래 왔습니다. 나중에 ‘그 문제가 왜 안 됐습니까?’ 하고 확인하면 ‘한나라당 간사 동의가 없기 때문에 진상조사위원회는 구성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대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공정택 교육감은 마침내 구속이 되고 오늘 우리 교육계는 비리의 냄새가 천지를 진동한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장래를 책임져야 될 이 나라의 교육계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 국회도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여당이 야 3당의 줄기찬 주장을 그렇게도 가로막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교섭단체가 주장하면 당연히 같이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이랬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여당인 한나라당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야당의 주장, 본위원의 주장을 계속해서 저지시켰습니다.

오늘 결과가 뭘니까? 오늘 정부로부터 교육비리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자? 우리 위원회가 보고나 받고 신문에 나면 그것이나 읽고 나중에 사후약방문, 이 교육계가 점점 더 나락으로 빠져 가는데 이런 식으로 처방만 한다고 하고 있을 겁니까?

저는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관권선거, 그리고 교육계 비리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우리 야 3당이 주장했고 본 위원이 주장한 대로 이 문제에 대한 매듭을 짓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그리고 현안에 대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매듭짓지 않고 그냥 주장으로 허공에 떠 버리고, 그리고 정부에서 변명식의 보고나 받는 그런 상임위원회라면 이게 무슨 처방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위원회 운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교육비리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확답을 위원장께서 해 주셔야 합니다. 지난번 속기록을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고 지금

또 다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는 사후약방문 처방식의 이런 진행은 우리가 안 된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걸** 여당 위원님들께서 괜찮으십니까?

임해규 위원님!

○**임해규 위원** 김영진 선배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때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 저희 위원님들하고 이 문제를, 진상조사특위를 만드는 문제는 아직은 상의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 한나라당에서도 진상조사특위 구성 건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논의 결과를 안민석 간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진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종걸** 김춘진 위원님!

○**김춘진 위원** 김춘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의사진행을 드리기 위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과 과학기술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회가 벌써 4월 달에 접어들었는데 우리 교육 문제 또 과학기술 문제 또 산하단체, 수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 위원회가 이 지경이 됐는지 위원장님께서 명확하게 해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무상급식 문제도 사회에서 크게 이슈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상임위에서는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교육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지방재정법 제88조에 의하면, 국가재정법 제88조에 의하면 국세감면비율이 지난 3년간 평균치의 0.5%가 더 이상 추가될 때는 축소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1%가 추가됐습니다. 또 2009년에는 0.7%가 추가됐습니다.

과연 우리가 재정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무상급식 못 하겠다고 하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축소계획은 어떻게 수립됐는지, 우리 무상급식에 관련된 이러한 예산확보 차원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동안에 어떻게 해서 우리 상임위가 열리지 못하고 이렇게 됐는지 해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민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걸** 지금 벌써 3월 말입니다. 2010년 3월 말인데 아직 2010년도 교육과학기술부와 산하 관련 단체의 업무보고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지금 우리 교과위원회의 실정이기는 합니다. 위원장으로서도 참 답답하고 참담하게 느낍니다.

오늘 그래도 비교적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상임위가 열리게, 오래간만에 열리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저도 감개가 무량합니다.

안민석 위원님, 오늘은 2시에 긴급현안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 관심 속에서 지금 답답하게 진행되고 있는 천안함(초계함) 침몰사고가 아직까지 아주 중요한 현안으로 되어 있어서, 오늘 현안보고가 되어 있어서 우리 상임위가 열릴 시간은 아주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그 점들 유념하셔서 위원님께서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석 위원님!

○**안민석 위원** 오늘 독도 문제 관련된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데요, 빨리 독도 관련된 현안보고 받고 상임위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여당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고 야당은 야당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는데 이걸 서로가 협의해서 서로가 만족스러운 오늘 상임위 진행을 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독도 관련된 문제를 포함한 현안보고 이것을 빨리 신속하게 진행을 하되 그전에 풀어야 될 매듭을 여당이 신속하게 풀어주고서 오늘 진행됐던 현안보고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조금 전에 김영진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교육비리 대책 그리고 아울러 여기 관련선거, 교육감 관련선거 개입까지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감 관련선거 진상조사와 교육비리 대책 관련된 우리 상임위 차원의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여당이 합의를 해 주시고, 이것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울러 지난번에 상임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서 부결된,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과위원님들까지도 기권 내지는 부결에 참여하셨던 학교체육법에 대해서 여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걸

동의하지 못하셨다면 그런 생각들을 정리해 주시고 아니면 다시 한번 심의를 하자라고 하면 그런 대로 정리해 주시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입장 정리를 신속하게 여당에서 해 주시고, 긴 시간 걸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5분도 안 걸릴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 입장 정리를 빨리 해 주시고 독도 문제를 포함한 현안보고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야당 간사로서는 여당의 입장 정리에 시간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한 5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하고 이 입장 정리에 필요한 시간을, 여유를 좀 드릴 것을 제가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종걸** 오늘 회의 시작하기 전에 모두에 우리 간사님들하고 같이 여기서 긴급회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간이 그렇게 부족합니까?

그러면 이철우 위원님 의사진행……

○**이철우 위원** 야당 위원님들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긴급히 회의가 열린 것은 독도 관련해서 국민들이 궁금해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되며, 그것 들어보고 난 다음에 무슨, 교육 관련 비리도 오늘 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정부의 정책을 들어 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주문을 하고 그래도 답변이 시원치 않을 때 무슨 대책을 세우는 이런 회의를 해야 되지 간사 간에 사전에 많은 협의를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의사진행발언으로 시간을 때우고, 또 오후 2시에는 본회의가 있는데…… 제가 봐서는 빨리 진행을 하고 정부 보고부터 받아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종걸** 권영진 위원님!

○**권영진 위원** 저희 상임위원회가 오랜만에 열렸는데요, 지금 현안보고 다 준비되어 있고 그 질의하는 순서인데 또 다른 조건을 가지고 그것부터 여당이 받고 하자 이렇게 해서야 우리 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까?

지금 교육비리 문제도 여기 현안보고 안건에 들어가 있고 충분히 우리가 교육부의 교육비리 문제와 관련된 대책이나 이런 게 충분한지 논의하고 그 바탕 위에서 그것이 미진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우리 상임위 차원의 대책위를 구성하든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든지 그 이후에 논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벌써 지금 10시 상임위 소집했던 게 지금 1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있지 않습

니까? 그런 면에서 위원장님께서서는 정해진 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하시면서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여야 간에 합의할 게 있으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걸**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는 것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임해규 간사님하고 안민석 간사님께서 우리 위원회 회의 진행 중에 안민석 간사께서 제기하신 그 두 문제에 관해서 좀 간사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권영길 위원** 간사 회의 전예요……

○**위원장 이종걸**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 위원**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중요한 의제가 사실은 교육비리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비리 문제 특히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 문제가 공식적으로 수사 선상에 떠올랐을 때 저희가 긴급히 상임위원회를 열어 서울시교육청의 비리 문제를 짚고 넘어가자, 그리고 아까 김영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번부터 제기되었던 공정택 당시 교육감을 둘러싼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되었었는데 처리 안 됐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했던 것은 실제로 공식적으로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또는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서 입증되지 않았지만 주로 교육 현장에서는 정말 교육비리 문제가 공공연하게 횡행되고 있다, 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때 여당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오늘 교육계의 비리 관련 현안 문제하고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 문제거든요. 저희 아까 야당 측에서 제기한 것은 이걸 다루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옛날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될 것 아니냐, 현안보고 받고 그러고 끝나면 뭐가 그게 문제 해결이 되겠느냐? 실제로 이미 다 드러나 있었던 건데 그것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상임위원회 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제시하고 하자고 하는데 이렇게 거부되어 있다, 또 오늘 의안으로 떠올라 있다, 그래서 긴급하게 이미 제기되었던 이 진상조사위원회 문제를 먼저 마무리 짓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

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다룰 교육비리 문제의 핵심적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양 간사 회의를 회의 진행 중에 이렇게 부탁을 드린 것은 온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다 먼저 위원장께서 이 문제를 처리하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미루어졌던 이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당 한나라당의 임해규 간사께서도 그 문제에 관해서 그걸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여당 측의 협의를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민석 민주당 간사 위원께서도 정회를 요청한 것도, 5분 정도, 그것을 타결 짓자는 이런 것이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를 우선 해결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권영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종걸 예, 권영진 위원님!

○권영진 위원 저희가 지금 상임위가 모처럼 열렸는데 4월 국회가 계속되잖아요. 오후 2시에 본회의인데, 지금 이 상임위는……

국민들은 지금 독도 관련해서 분노에 차 있습니다. 그러면 독도 관련해서 보고받고, 그것을 따져 묻고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우선 풀어 드려야지요. 그렇게 하고 지금 이 회의를 마치고 나서든 아니면 독도 문제를 논의하고 나서 교육비리 관련 진상조사를 구성하든지 그 논의를 해도 되지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보고도 받기 전에, 그러면 한나라당에서 진상조사특위 안 받으면 이거 보고 안 받으실 겁니까?

도대체 회의진행 왜 이렇게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4월 국회 계속 열려 있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또 4월 국회도 상임위 제대로 한 번도 못 하고 지나갑니다. 지금 다 현안보고 약속된 대로 진행……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안을 두고 왜 자꾸 이렇게 회의를 운영하려고 그러십니까?

○김영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걸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지금 일견 말씀을 들어보면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듯합니다. 그런데 국회 속기록을, 교과위 속기록을 놓고 검증을 합시다. 현안이 터졌을 때 그 현안에 대한 처방은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정택 전 교육감 문제가 나왔을 때 교육비리진상

조사위원회 그리고 불법사학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하자고 했을 때 꼭 오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꼭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일이 1년 이상 진행됐습니다.

아까 임해규 간사께서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교육비리진상조사위원회를 그때 야당이 구성하자고 주장할 때 그때 그것을 받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유감이라고 표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행동으로 따라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 지금 어쨌든 간에 2개 야당이 이 문제를 5분 정도면 가능할 테니까 정회를 하고 여야 두 분 간사가 이 문제 논의하고 교육비리진상조사위원회 합시다, 안 하겠다면 모르지만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렇게 하면 5분도 안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뭘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자꾸 회피를 하고, 더 이상은 우리가 못 참겠습니다.

만일 지난번에 교육비리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하자고 저희들이 제안하고 그때 파행이 되고 그럴 때, 벌써 한 6개월 전입니다. 그때 우리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됐다. 지금 진동하고 있는 교육비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됩니까?

우리가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일들은 이것은 어찌 보면 여야를 초월해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성하면 자성의 결과가 실천으로 옮겨져야지 시간이 조금 성이 있다, 왜 5분이면 될 일을 뭐 때문에 시간 조급성 때문에 미루자는 겁니까?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이렇게 위원회 운영하면 저희들은 절대 여기 임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께서는 결단을 내리세요. 위원장께서 직접 정론관에 가서 가지고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하겠다고 발표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안 비리가 터져 가지고 이 난리인데 왜 이것을 미루려고 하십니까? 위원장님 정말 그렇게 위원회 운영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안 됩니다.

○위원장 이종걸 김세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金世淵 委員 지금 교육비리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맞습니다. 빨리 우리가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조리를 빨리 해소해야 되는 시급한 인식을 같이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의 선후가 있고 경중이 있습니다. 교육

비리 문제는 이것이 1, 2년 사이에 발생되고 커진 일이 아니고 수십 년에 걸쳐서 누적되어 온 문제이고 따라서 해소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머리를 모으고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사실상의 독도 영토 도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내우가 있고 외환이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안의 문제를 바깥의 문제가 생기면 잠시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나라 국가 존립에 관한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생겼는데, 오늘 의사일정 안건 두 번째로 일본의 사회교과서 독도 영토 표기 검정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을 올려놓고서 계속 지금까지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반복되었던 실제하기로 해 놓은 의사일정을 진행 못 하고 의사진행발언만 계속 반복하는 이 상황이 또 다시 반복되는 데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러운 입장을 밝히고……

○**이철우 위원** 옹소.

○**金世淵 委員** 그래서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까.

일단 현안보고 중에서 독도 관련된 문제만 따서 떼어서라도 먼저 보고받고 그리고 의사진행안건 제2항 검정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논의를 하시지요. 오후 2시까지밖에 시간이 없는데 언제까지 이려고 있을 겁니까? 위원장님께서 계속 이렇게 아무런 입장도 정하지 않으시고 의사진행발언만 계속 듣다가 산회하실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걸** 안민석 위원님!

○**안민석 위원** 저는 정말 진정으로 여당 위원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공정택 교육감 감쌌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누가 감쌌어요? 말을 그렇게…… 만날 어떻게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정치공세만 하세요.

○**안민석 위원** 말 끼어들지 마십시오, 권영진 위원님. 제 말씀 마치고 이야기하십시오.

공정택 교육감 감쌌다고 그거 공방되어 가지고 2008년 국감이 파행되지 않았습니까? 모 위원은 공정택 교육감 발언조차도 발언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속기록에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지금 와 가지고 ‘우리가 공정택 감싸안은 적 없다. 무슨 소리냐?’ 그러면 그 당시에 공정택대책위원회 왜 반대했습니까? 그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해명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리이러해서 공정택 문제 야당과 같이 규명하려고 했는데 안민석 간사 지금 무슨 소리냐?’ 같이 규명하려고 노력했던 근거 한번 오늘 대 주십시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공정택대책위원회를 우리가 집요하게 야당이 추궁을 했고, 여당은 방패 역할을 하느라고, 여당으로서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요. 청와대하고 교감이 있는 공정택 교육감 당연히 감싸줘야 되는 것이고 또 혹시라도 보궐선거에서 새로 여당하고 전혀 코드가 다른 김상곤 같은 교육감 들어서면 얼마나 낭패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감쌌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권영진 위원님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러세요? 제 발언 끝나고 반박해 보십시오.

○**金世淵 委員** 위원장님!

○**안민석 위원** 발언 중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결례하게.

○**이철우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셔야지요.

○**안민석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이 과거에 공정택 그 당시 사항과 제가 연상이 되는 겁니다. 교육비리 척결의사가 있으면 ‘비리진상조사위원회, 좋다. 하자’ 그렇게 하고 바로 보고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빨리 독도보고 받으시다. 그러나 교육비리대책위원회 야당이 요구하는 합리적이고 온당한 요구는 여당도 들어줘서 같이 교육비리 척결에 대한 의지 보여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왜 그렇게 여당 내에서 입장 조율이 필요한 겁니까? 5분만 정회하고 이거 빨리 입장 정리해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대책위 구성하자, 좋게 통 크게 서로 합의하고 그다음 독도 빨리 넘어갑시다.

자, 다시 한번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종걸** 김세연 위원님!

여기까지만 의사진행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金世淵 委員** 사실관계가 지금 호도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바로잡고자 합니다.

공정택 교육감을 한나라당이 감쌌다고 주장을 방금 하셨는데 그 말씀은 온당치가 않고, 통상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국회에서 진상조사를 하

든 국정조사를 하든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구체적인 더 큰 문제가 발견되면 검찰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미 검찰조사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고, 그 당시에 다른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었는데 공 교육감의 선거 당시의 문제 가지고 다른 모든 현안들이 다 덮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과위 회의진행을 하자고 했던 것이지 그것을 자꾸 다른 방향으로 사실을 호도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히 바로잡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회의목적이 있는 만큼 목적을 줌, 이렇게 회의를 자꾸 표류시키시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명확히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종걸 권영진 위원님!

○권영진 위원 공정택 감싸기 했다고 얘기하니까, 지금 공정택 감싸기 하면 MB정부가, 한나라당이 공정택 감싸기를 하면 저 사람을 구속시키고 하겠습니까? 교육계의 비리 문제는 1, 2년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파헤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민주당, 열린우리당 정부 때 이처럼 교육계 비리 바로잡으려고 노력한 적 있습니까? 교육비리 혁파해서 이렇게 수사하고 교육감 구속하고 이런 적 있습니까? 아니, 그것을 자꾸 그렇게……

저도 정치적 사안으로 얘기할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진상규명을 하자고, 민주당 위원님들이 부당하게 감사 방해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꾸 당의 입장을 가지고 정쟁화되고, 그리고 지금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일본교과서 독도 영토 표기 문제 관련해서 우리가 이것은 논의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가면 뭐 할 겁니까? 교과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일본은 저렇게 영토 도발하고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이 공정택 감쌌다고 그러면서 그거 진상규명하자고 그러고, 한나라당은 MB정부 들어와서 교육비리 척결하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열린우리당 정부, 민주당 정부 때 뭐 했냐고 얘기하고 이러다가 또 파행했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진상조사하려면 할 게 많습니다.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교과서 독도 영토 표기 관련 문제는 이미 합의돼서 올라온 문제이고 보고를 받자

고요. 받으시고,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양 간사 나가서 상의를 하세요. 그렇게 하면 되지 이것을 가지고 또 왜 정회를 요구하고 계속 의사진행발언으로 정치공세를 끌고 갑니까?

○김춘진 위원 위원장님!

○이철우 위원 의사진행발언 그만합시다.

○위원장 이종걸 김춘진 위원님까지만 하겠습니까.

이상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이상민 위원 예.

○김춘진 위원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08년 국감 시 본 위원이 공정택 교육감의 선거자금에 대한 통장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확인차 공정택 교육감한테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당의 모 위원께서 발언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마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지금 공정택 교육감에 대한 이런 문제가 2008년 국감 때 제대로 해결이 됐더라면 이런 교육계의 비리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까지 갔습니다. 대법원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공정택 교육감이 위법행위를 했다 해서 교육감 직을 상실했습니다. 교육감 직 상실한 이후에 구속을 한 겁니다. 지난 26일 날 구속한 것은 22년 만에, 1988년 최열곤 전 교육감 구속 이래 최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은 우리 교육위원회가 역할을 충분히 했더라면 저는 교육계의 비리를 확산시키지 않고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원회 역할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육감이 구속되는 지경에까지 다다랐다고 봅니다. 만일에 그 당시에 교육감 문제를 해결했었다면 당연히 공정택 교육감은 구속이 안 됐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민석 위원 분위기 좀 가라앉히고요. 입장 존중할게요. 5분 정도, 야당이 요구를 했으니까 계속 이 상태로 시간 보내는 것은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뭐 아니면 아닌 대로 그 입장을 저희들이 요청했으니까 빨리 정리하시고 정회 후에 논의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종걸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 관심도 그렇고 언론 관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저희들이 교과위에서 뭔가를 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분쟁 상태에서 그냥 또 닫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깊이 심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당 위원님들도 진상 규명에 관한, 진상 위원회에 관한 구성 문제와는 별론으로 진상 규명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다 이렇게 공감하시는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결론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5분 정도 정회했다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잠깐만요. 그 전에 야당에서 지금 교육비리 될 구성하자고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게 정확하게 됩니까?

○안민석 위원 아니, 그동안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2월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권영진 위원 무슨 문제에 대한 교육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모든 교육비리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하자는 겁니까?

○위원장 이종걸 그 문제에 관해서 그러니까……

○권영진 위원 아니, 지금 검찰에서 다 조사하고 있고……

○김영진 위원 조사위원회 구성이 합의 안 되면 우리 위원들이 모여서 그걸 정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종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논의가 매듭이 안 되더라도 5분 후에는 바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임해규 위원 일단 야당에서 요구하신, 저희들이 국회법에 보니까 다양한 활동의 위원회가 소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 소위원회 활동에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최근에 불거진 교육계 비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또 근절 대책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그래서 안을 만들어 내고 이렇게 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봅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를 어떤 범위로 어떻게 구성하고 또 논의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가 사실 오늘 상임위를 연 것도 독도 문제 때문에 긴급하게 오늘 본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어떤 정도의 범위에서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서 정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결정은 다음번 우리가 상임위를 열 때 결정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은 원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취지로 오늘 긴급하게 회의를 열었던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처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안민석 위원 구성을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임해규 위원 다음번 회의 때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하는 것이 우리의 제안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임해규 간사께서 현재 발생되고 있는, 사회문제가 크게 되고 있는 교육계의 비리, 현안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그다음에 대책을 논의하는 기구를 만들자는데 대한 동의는 하신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권영진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김영진 위원 예, 그건 동의를 하셨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구성한다, 그런데 지금 시간관계상 독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오늘은 이 독도 문제라든가 당면 현안 질의를 하고 그리고 다음 열릴 때 그 안에 간사들이 합의해 가지고 그 열리는 회의에서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권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모시자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조전혁 위원 아니야, 위원장 내가 할거야.

(웃음소리)

○김영진 위원 위원장 문제는 지금 제기할 것 없고요.

○임해규 위원 잠깐 국회법을 저희들이 봤는데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위원회의 활동기간과 활동범위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회 의결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계 비리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마련하고 이런 것은 우리 위원회로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구성은 하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여야 간사 간에 일단 안을 좀 만들어서 다음번 회의 때 의결을 하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또 덧붙여 말씀드리면 물론 이걸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치적 활동이지만 저희들도 여기에서 금방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논의는 좀더 우리 내부적으로 또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민석 위원** 학교체육법에 대한 입장도 한번 정리해 봐 주십시오.

○**임해규 위원** 아직까지 그 논의는 강력한 문제를 제기한 해당 위원님이 안 계셔 가지고 논의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회의는 독도 문제 때문에 긴급하게 회의소집을 요청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4월 임시국회도 시작을 안 한 상태잖아요.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2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임위를 앞으로 계속 열어야 되지 않겠어요? 법안심사소위도 저는 소위원회장으로서 이번에 많이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동해서 4월 국회 때 일정하게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그 외에 많은 문제들을 앞으로 심의하고 논의하고 할 건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러니까 안민석 위원님께서 제기하시는 그 학교체육법 관련된 문제도 다음번 회의 때 저희들이 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알겠습니다.

○**朴英娥 委員**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걸** 감사드립니다.

박영아 위원님!

○**朴英娥 委員** 송파갑 출신 박영아 위원입니다.

지금 참 우리 국민들이 개탄하고 또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속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계의 비리에 대한 여러 가지가 폭로가 되고, 또 정부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계의 비리가 하루 이틀 된 건 아니지만 지난 몇 년 동안에, 특히 교육감 선거를 직선으로 한 이후에 평

장히 과열되고 증폭된 측면이 있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께서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위원회가 2008년에 똑같이 교육계 비리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는 야당의 제안에 대해서 구성하지 못한 것은 다 아시겠지만 그 당시 문제가 됐던 공정택 교육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구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 것이 마치 사법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찰 또는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리 수사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진상조사위원회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교육계의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생각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아까 정회된 5분 또는 10분 동안의 짧은 기간 동안에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우리 상임위 밑에 만들어질 소위원회의 명칭조차도 우리가 좀더 논의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당 위원님들도 네다섯 분밖에 안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불리 이름에 대해서 구성을 합의했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발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야당 간사께서 학교체육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 아시다시피 학교체육법은 3월 2일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자유투표에 의해서 부결된 법안입니다. 부결된 법안이 새로 상임위에서 논의되기 위해서는 다시 상정되고 그것이 정상적인 법안 심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 상정되지도 않은 새로운 법안에 대해서 우리 한나라당 간사나 또 한나라당 위원들한테 입장을 밝히라고 하는 것은 국회법 절차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2일에 학교체육법이 부결됐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우리 상임위의 법안 심의를 비롯한 모든 논의가 법을 존중하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철우 위원** 위원장님,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그만두고 이렇게 합시다.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안민석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이종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한나라당 입장이 정리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여당 간사님이 정리하시면 그

걸로 빨리 긴급 현안보고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정회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간사님, 제가 여쭙게요. 정리가 됐습니까?

○위원장 이종걸 임해규 위원님 말씀하시고 조전혁 위원님을 끝으로 의사진행발언은 이제 그만 하겠습니다.

○조전혁 위원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독도 문제 우리가 지금……

○위원장 이종걸 잠깐만요, 임해규 위원님……

○임해규 위원 하세요.

○조전혁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영토주권하고 관련된 독도 문제 관련해 가지고 긴급히 열렸는데 이 문제 가지고도 앞에 무슨 조건 붙이고 이래야 정말 됩니까? 이제 좀 반성합시다. 나머지 문제는 나중에 토론해도 되지 않습니까? 뭐든지 그렇게 조건 붙이고 토 달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정말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중하십시오.

○위원장 이종걸 이제 의사진행발언은 대충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도 학교체육법에 관련해서는 제가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까지 했습니다. 여야 합의, 그 경위야 어떻든 간에 여야 합의로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이것은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념하셔서 이번 4월 국회 회기 때 적극적인 사고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주호 차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현안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아니, 잠깐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이종걸 여기까지 하시지요.

○이상민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 이번 안건부터 먼저 처리하고 현안보고 들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렇게 해야 되지, 이따 또 이석돼서 정족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번 안건을 먼저 올려서 결의안 하고서 현안보고 들으시지요.

○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11시46분)

○위원장 이종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잠깐만 좀 기다리시지요.

차관님 말씀과 현안보고를 받기 전에 오늘 의

사일정 추가상정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 제1항 현안보고, 2항 일본의 사회교과서 독도 영토표기 검정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2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위원회 사정에 의해서 전체 상임위 중 우리 위원회만 200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위원장과 양 간사간의 협의로 오늘 의사일정 제3항에 200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추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 일본의 사회교과서 독도 영토표기 검정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1시47분)

○위원장 이종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일본의 사회교과서 독도 영토표기 검정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임해규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일본의 사회교과서 독도 영토표기 검정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국 정부가 2010년 3월 30일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국 영토로 왜곡 기술 또는 표기한 소학교 사회교과서를 검정승인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 아울러 즉각 사회교과서의 검정승인을 취소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국 정부가 독도를 일본국 영토로 왜곡 기술 또는 표기한 소학교 사회교과서를 검정승인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서 엄중히 규탄함과 아울러 즉각 사회교과서의 검정승인을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국 정부가 독도를 일본국 영토로 왜곡 기술 또는 표기한 사회교과서를 검정승인한 것은 국제법 질서에 위반되고, 한일 양국 간의 신뢰관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근본 질서마저 무너뜨리는 행위임을 직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독도가 명백하게 대한민국

의 고유 영토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일본국 정부가 교과서 왜곡을 반복하는 것은 과거의 불행했던 역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 없이 역사를 오만하게 인식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한일 양국의 미래세대 간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동반자관계와 우호관계 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것임을 우려하며 일체의 역사왜곡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국 정부가 독도를 일본국 영토로 왜곡 기술 또는 표기한 사회교과서에 대하여 검정승인한 것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퇴행적 발상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자초하는 행위가 될 것임을 경고하며 아울러 검정승인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하는 대한민국의 노력에 아시아 각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이상 촉구결의안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준비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걸 김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사실은 오늘 우리가 현안보고 속에 2항에 독도 영토표기 문제가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결의안 채택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성원 문제가 있고 또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선 절차를 바꿔 가지고 결의안 채택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임해규 간사께서 제안설명 하셨는데 저 안대로 우리가 채택하기를 제가 동의하면서요, 다만 한 가지는 다른 현안보다도 결의안 채택을 지금 하고 바로 이어서 독도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결되게 말입니다. 그렇게 독도 문제에 대한 우리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질의를 할 분 몇 분이 준비된 분이 있으면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안보고 하고 독도 문제는 매듭을 그렇게 지어 버리는 것 좋겠다 싶습니다.

○위원장 이종걸 위원장으로서도 김영진 위원님 말씀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에 앞서서 오늘 의사일정 제2항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일본의 사회교과서 독도 영토표기 검정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내용에 대한 자구수정과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께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의결할 사항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53분)

○위원장 이종걸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피감기관들에 대하여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는 위원회 선정 24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 56개 기관 등 총 80개 기관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607건을 선정·수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자구정정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께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안보고(계속)

가. 일본교과서 독도영토표기 관련

나. 교육계 비리관련

다. EBS강좌 수능출제 관련

2. 일본의 사회교과서 독도 영토표기 검정승

인 취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계속)

○**위원장 이종걸** 그러면 일본의 사회교과서 독도 영토표기 검정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과 관련된 질의와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또는 인사말씀을 통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차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시고 현안보고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교육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성원하여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일본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등 최근 제기된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본 정부의 사회교과서 검정결과와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협동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 이미 동북아역사재단의 학술회의와 독도연구소의 일본 고지도 언론공개를 통해 독도가 한국 고유 영토임을 알린 바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서도 독도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교육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공무원 인사비리와 관련하여 교장공모제 및 수석교사제 확대 등 인사제도를 선진화하고 지역교육청도 규제기능을 줄이고 학교지원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교육장 공모제를 통해 운영의 투명성도 높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학교 재정 및 학사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비리 발생의 소지를 없애고 감사기능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EBS 수능강의와 수능시험의 연계를 70%까지 높여 학생들의 수능시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6월 및 9월 모의평가에서 단계적으로 연계율을 확대 실시한 후 결과를 분석·보완함으로써 70% 달성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기조실장의 보고에 앞서 그동안 인사발령으로 교체된 교육과학기술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모 감사관입니다.

교육계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타파하고 교육계의 비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특별히 부장검사 출신을 임명하였습니다.

이원근 학교자율화추진관입니다.

성삼제 교육비리근절 및 제도개선추진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앞으로도 교육과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걸** 그러면 기조실장님 현안보고를 듣는 시간인데요.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면 잘 되어 있는 이 유인물을 토대로 참조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약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민주당의 김영진 위원입니다.

일본 초등교과서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하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지난 3월 30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교과용 도서검정 조사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김영진 위원** 그 심의위원회 개최 내용은 이미 알고 계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김영진 위원** '시마네현에 속해 있는 다케시마가 한국 정부에 의해서 불법 점거되었다' 이렇게 기술을 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김영진 위원** 경계선으로 독도를 일본 영해에 포함시킨 소학교 5학년 사회교과서 5종 모두에 대해서 일본의 문부성이 합격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문부성이 초등학교·중학교 교과서에 대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독도 문제를

표기하고 합격결정을 내린 일은 사상 처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 일본의 위대한 국민들의 선거혁명의해서 54년 만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되고 하토야마 정권이 출범을 함으로써 상당히 역사에 대한 매듭을 푸는 진전이, 역사 발전이 앞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했습니다 마는 참 찬물을 끼얹는 이런 결과가 돼서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교과부의 현안보고 자료 2쪽에 나열된 향후 추진계획을 죽 봤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시·도 교육청별로 학생과 교원에 대해서 독도교육을 강화한다, 교과서에 독도 서술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도대체 내년도 교과서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얼마나 기술하겠다는 것인지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본이 저렇게 가장 강도 높게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를 대처하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의 내용은 너무 밋밋합니다. 또 교육시간을 늘리겠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내용이 없습니다.

기존에 해 왔던 학생에 대해서 독도교육, 독도 교원연수, 교과서 서술, 관심을 갖고 더 잘 하겠다 하는 정도이고요 어찌 보면 교과부가 할 수 있는 하나의 한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교부는 일본대사를 불러서 이례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초강경 항의를 하고 논평을 발표하고 했습니다.

이주호 차관께서는, 일본 문부성의 거의 만행에 가까운 이런 조치에 대해서 교과부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일본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잘못된 영토관념 또 잘못된 역사관을 주입시키는 것은 정말 심히 우려되고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과부 차원에서 주로 아이들의 교과서나 또 교육 과정에 대해서, 특히 독도교육을 많이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죽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 드릴 수 있는 독도 인정 교과서가 별도로 제작이 돼서 지금 배포가 되고 있고요, 또 교육 과정도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독도 내용 서술을 훨씬 강화하고 있고 또 2009 개정 교육과정 고시 및 해설서 개발에서도 독도 관련 내용은 더욱 강화

할 예정입니다.

○김영진 위원 좋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본이 시마네현을 중심으로 한 독도 문제를 전국의 국민들에게 문제를 확산시키고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을 들여서 전방위적으로 방어 그리고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아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일본의 이런 강력한 대처에 우리 교과부가 지금 대처하고 있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차관께서도 기억하실 텐데 지난해 2010년도 예산 심사 때 말입니다. 제가 동북아역사재단의 독도 및 동해 표기오류 시정사업 예산을 2억 증액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한 것 아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김영진 위원 그런데 소관 상임위원 교과위까지 통과가 됐는데 작년 말에 여당의 단독처리 과정에서 이 2억마저도 최종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를 정부로서는, 교과부로서는 2억이라는 정도의 예산이 일방적으로 삭감이 되는 것을 바라만 보고 계셨지 않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됩니다.

2008년도에 국정감사에서 제가 반크와 독도아카데미 등 민간단체의 지원에 대한 예산, 이것 깎았다고 지적을 해서 언론에 대서특필된 일도 알고 계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김영진 위원 그리고 그 보도가 되니까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시니까 반크에 대한 지원이 이제 다시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도문제는 정부나 공공기관 차원에서 맞대응을 하기에는 물론 외교적으로 민감하기도 하고 또 일본이 노리는 국제분쟁지역으로 이걸 삼켰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파악을 합니다마는 이 반크라든가 독도수호국제연대 같은 민간단체에는 우리가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김영진 위원 이주호 차관께서는 반크라든가 독도수호국제연대, 소위 민간기구, 자생적인 NGO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을 어떻게 강화하실 겁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먼저 김영진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꾸준히 활동을 해 주신 덕분에 저희 반크 예산 지원은 2010년도에 1억 2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민간 차원의 독도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증액 노력을 더욱 더 활발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학술연구에 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도 관련 학술연구 지원비도 저희가 대폭 지원하기 위해서, 특히 연구재단의 독도 관련 연구를 사회과학 지정 주제로 지정한다든지 또 중점연구소인 영남대 독도연구소에 지원을 강화한다든지 또 다양한 국내외 학술대회에 지원한다든지 해서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다양한 민간단체 또 학술단체의 활동을 더욱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우리 국내에 NGO나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활동 강화와 더불어서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일본의 시민사회단체나 양심 세력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또 일본의 학계라든가 지식인들은 지금 이렇게 일본이 교과과거서 왜곡하려고 하는, 과거에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가한 역사적 과오를 또 서술을 통해서 변경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지식인들이나 사회단체와 폭넓은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또 새로운 동기를 부여해야 되는데요, 작년에 우리 동북아역사재단의 정재정 이사장과 지금 자리에 안계신데 황우여 위원님과 제가, 여야가 같이 일본에 가서 지식인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참석을 해 보고 '아, 동북아역사재단이 정말 상당히 깊이 있는 외교활동을 하고 있구나, 이런 노력은 정말 계속돼야 되겠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역사재단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가 또 민간외교 활동을 사실상 우리 주무부서인 교과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동북아역사재단 활동이 활성화되고 민간기구가 또 거기에 더 활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노력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독도아카데미만 봐도 여기 졸업생들이 서울

대학을 비롯한 연세대 등 수도권에 있는 대학뿐만 아니라 지방대학까지도 무려 15 대 1입니다. 독도아카데미에 연수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데 지금 13기가 나왔는데 저도 매 기마다 가서 격려사도 하고 격려도 해 주고 같이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활동도 독도아카데미를 정부가, 관이 주도해 가지고 하려고 할 때는 학생들이 그렇게 잘 참여를 덜 한 일도 있지만,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도아카데미 졸업생들이 벌써 1300명이 넘었는데 이런 자생적인 민간활동도 우리 교과부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특별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말씀해 주신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현 위원** 우선 일본정부는 독도영유권 침탈을 담은 역사교과서 검정승인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주호 차관님, 지금 보고자료 3페이지 참고 1을 보면 주로 독도가 우리 영토 관할하에 있음을 단순 기술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본인들한테 독도 영유권 침탈에 대한 주장과 관련해서 계속 주장해도 이 사람들은 교과과서를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일본의 역사 왜곡의도 또 현대사 왜곡 부분을 강조해서 우리나라 국정 및 검정 교과과서를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의합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이군현 위원**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보고자료 중에 EBS 수능강의 교재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수능시험 70%를 연계하겠다, 하고 거의 내용이 다 거기에 강조가 되어 있는데 사교육비 절감하는 방안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주장해 오지만 사교육비 절감 방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공교육을 살리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수능시험을 70% 연계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퍼센티지를 정해서 사용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연계의 의미는 EBS 수능교재에서 그대로 출제되지 않는다면 핵심 개념이나 원리에 대한 이해 등은 결국 다시 학습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70%라는 것을 어떤 기준에 맞추느냐는 그 학부모하고 수험생이 판단을 할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 느끼거나 판단되어질 걸로 보는데 자칫 잘못하면, 물론 EBS 수능강의 교재에 의해서, EBS에 의해서 사교육을 줄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고, 저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1년 후에 자칫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가 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 EBS 수능 강의 기대심리가 굉장히 지금 증폭이 되고 있는데 이 기대심리만 증폭시키고, 또 EBS 교재 매출은 상당히 증가할 거라고 보는데요. 보니까 비용이 약 26만 원 정도 소용이 되는데요, 그런데 EBS 수능강의 내의 수능 출제 비중이 말 그대로 만약 70%가 되지 못한다고 학부모나 학생이 판단하면 다시 다른 사교육 방법으로 회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 효과는 높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대책으로서 우리가 잘, 보다 정치한 안을 조금 더 검토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위원님의 질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특히 공교육 강화와 EBS 연계 강화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EBS 강사들도, 물론 스타강사들도 많이 영입했습니다만 학교 현장에서 아주 우수한 교사 분들을 영입해서 그분들이 EBS에서 충분히 강의를 하도록 하고 또 그분들이 돌아가서 학교에서 그런 수업의 전문성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학교에서 교사 분들이 강의할 때 EBS 강의 내용 중에 클립으로 짧게 짧게 해서 동영상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걱정하시는 EBS 70% 연계로 공교육 강화의 취지가 오히려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두 정책이 다 잘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리고 사교육시장에서 잘 하는 것은 우리가 배울 게 있다 하면 공교육에 도입

가능한 것은 도입을 해서 빨리빨리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나 교육청별로 입시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요, 또 입학사정관제 시행에 따른 스펙 관리를 방과후학교에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교육 쪽으로 가지 않도록, 이런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공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걸** 이군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김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진 위원** 차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2008년 4월에 첫 한일 정상 회담 한 것 알고 계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김춘진 위원**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서 과거보다는 미래를 직시하자며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김춘진 위원** 그런데 지금 하토야마 유키오 정권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청산은커녕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를 지속하고 있지요?

일본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 교과서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정상회담 이후에도 7월 달에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또 작년 12월에 고교 해설서, 또 2010년 초등학교 검정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기로 했는데 이걸 가지고 일본 학생들이 배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운다면 거짓 교과서 가지고 배우는 것 아니에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춘진 위원** 그래서 일본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걸 배우면, 이를 일본 정부가 추진해서 명백한 영토 도발·침탈 행위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동의합니다.

○**김춘진 위원** 미래지향적 발전도 중요하지만 역사왜곡 시정과 영토주권 확보는 국가의 틀을 유지하는 중요한 가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명

박 대통령과 정부는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의 영토주권 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할 때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동의합니다.

○**김춘진 위원**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 2008년 7월 9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15일자로 요미우리신문은 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총리가 다케시마를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보하자 대통령께서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그 보도는……

○**김춘진 위원**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국내에서 MB 독도 발언, MB 독도 표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결국에는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김춘진 위원** 우리가 청구 소송을 냈는데 소송의 본질은 일본의 독도에 대한 분쟁지역화 움직임에 국민이라도 나서서 강력하게 대응하자는 것이었지요, 우리 국민들이 소송 제기한 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김춘진 위원** 그러자 요미우리신문이 사실이다, 또 아사히신문도 사실을 보도했다고 강경하게 맞서고 나왔지요? 그래서 우리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또 정부는 그런 움직임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분쟁지역화에 도움이 된다며 조용히 해결하자고 했지요?

그런데 청와대는 김은혜 대변인을 통해서 요미우리의 답변은 자신들의 보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일종의 변명에 불과하다고 하는 정도였지요? 또 여당은 ‘민주당은 2008년 7월 요미우리가 잘못 보도한 이른바 MB 독도 발언을 다시 도마 위에 올려놓고 국익에 반하는 위험한 정치 게임을 벌이고 있다’라고 논평했지요?

정부와 여당은 이게 정치 게임이고 선거용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시각이 그렇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그 부분은 일단 우리 정부가 요미우리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했고 또 일본 정부도 기자회견까지 자청해서 사실무근이라고 확인을 해 준 거고요. 정부 차원에서는 종결이 된 사안입니다. 또 요미우리도 일본이 사실무근임을 확인한 이후에 인터넷에서 보

도를 철회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김춘진 위원** 그러면 사실이 아니면, 여기에다 사실이라고 해서…… 우리 판결이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지금 소송은 아마 진행 중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춘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해서, 정부는 손해배상 청구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청와대 대변인도 논평했습니다만 이것은 종결이 된 사안이고 사실무근이기 때문에……

○**김춘진 위원** 그러면 그 신문사를 응징해야 되겠지요. 거짓말 보도하는 신문사 놔두면 되겠습니까?

2005년 3월 23일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한일 관계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에게 독도는 조그마한 섬에 대한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 확립을 상징하는 문제입니다.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포기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일본의 대사나 불러 가지고 조용히 타이르고 이래서는 안 된다, 조용히 타이르고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는 저는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이 터지면 의례적인 조치, 이래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용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를 직시하게 했던 하토야마 유키오 정권도 독도 문제에 관한 한 과거 정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응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교과부 차관님께서 장관님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께 직접 건의해서 일본 총리한테 강력하게 항의하고 또 시정을 촉구하도록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그렇습니다만 우리 교과부 단독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김춘진 위원** 아니, 교과부에서 지금 대통령께 그렇게 건의를 해서 대통령이 일본 총리한테 강력하게 항의하고 또 백지화시켜라, 시정을 촉구

하고 그럴 의향이 없으신가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저희가 총리실과 외교통상부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춘진 위원**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강력하게 일본에 항의하고 또 백지화시킬 수 있도록 강력한 용단을 내려야 될 때라고 봅니다. 대통령께 반드시 건의해 주셔서 가지고 대통령이 일본 총리께 이렇게 해 주실 것을 저는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 교과부 간부님들, 차관님하고 특히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님, 혹시 독도에 가 보셨습니까? 차관님 독도 가 보셨어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이철우 위원** 이사장님!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정재정** 가 봤습니다.

○**이철우 위원** 가 봤습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정재정** 예.

○**이철우 위원** 몇 번이나 가 봤습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정재정** 한 번 갔습니다.

○**이철우 위원** 현지 가 보면, 저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은 실효적 지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론을 우리 교과부에서 내놔야 됩니다, 왜 독도가 우리 거냐 이론을.

차관님, 실효적 지배가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다양한 형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활발하게 학술활동을 한다든지 또 독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실질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우 위원** 학자들 간에는 실효적 지배가 우선 사람이 살아야 되고 경제활동을 해야 된다, 두 가지가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과부에서 이론을 만들어서 우리 정부가 공동 대응할 때 반드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과거에 일본 눈치 보느라고 그런 조치를 전혀 못 취했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는 이론 바탕을 만드는 데가 교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교

적으로 김춘진 위원께서 말씀한 외교적 대응 이런 것은 외통부가 있고 또 다른 부처에서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교과부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논리적으로 우리 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방금 차관님께서 보여 주신, '독도'라는 교사용 지도서네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 위원** 학생용은 없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학생용도 있습니다.

○**이철우 위원**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이철우 위원** 학생들도 만화 형태로 아주 쉽게, 어렵게 하지 말고 쉽게 해서 학생들이 독도가 우리 거다,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고 누구나…… 저도 아직 확실히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고 무엇을, 잘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학생용 참고서 이런 것을 만들어 주시고 또 연구를 많이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우 위원**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연구하지만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해서…… 교과부에서 용역을 줄 수 있나요, 동북아재단에서 줄 수 있나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지금 동북아역사재단을 통해서 주로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위원** 외국에 우리 독도 연구를 하도록 용역을 준 사례가 있습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정재정** 예, 많이 있습니다.

○**이철우 위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정재정** 지금 우리들이 구미 학자들한테 한 15명 정도, 유명한 사람한테 용역을 주고 심포지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위원** 일본 학자들한테는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정재정** 일본 학자들 한 8명 정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철우 위원** 통상 우리도 대학 교수님들이 학

술 발표나 논문을 쓰면 누가 뭐 썼는지 잘 모르 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주호 차관님 박사학위 논문이 뭔지 무엇을 주장했는지 잘 알기가 힘들니다. 그래서 독도 관련해서 그것을 많이 연구해서 유명한 분들이 한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일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본 유명한 사람이 연구한 역사…… 지금 역사적으로 접근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역사보다는 지리적으로 접근하는 거거든요. 역사로 접근하면 우리한테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그래서 지리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일본 내에 홍보를 하고 또 미국이나 강대국에 이것을 알려서 국제 재판소에 가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런 밑받침을 할 수 있는 교과부가 되어 주고, 특히 동북아재단에서는 그런 분야에 더욱더 활발한 활동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북아재단에서 앞으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또 다른 외에 기구가 더 필요하면 기구, 또 외통부나 다른 부처에서 좀 나약하게 나갈 때 왜 그렇게 나가는지 그렇게 나갔을 때 이것은 정말로 안 된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 역사적으로 망한다, 이런 것을 논리적으로 국민들한테 설득해서, 외통부는 조용한 것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이론 받침을 해 줄 것을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재정 이사장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정재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정재정입니다.

지금 이철우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하는 큰일 중 하나가 독도영유권 공고화하는 사업도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그리고 국제사회에 우리의 의견에 동조하도록 만드는 작업을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을 향해서는 일본의 독도연구자들을 집중적으로 우리들이 커버하고 있고 그들과 공동연구 또는 심포지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도 일본 나름대로 자기들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영진 위원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일본의 오피니언리더들을 저희들이 초청도 하고 그간 함께 세미나 같은 것을 많이 개최하고 해서

작년에 현장에 가서서 위원님들이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황우여 위원님도 같이 가셨습니다마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는 지금 중요 대학, 하버드대학이라든지 스탠포드대학 등등의 연구센터와 연계를 해 가면서 공동 연구하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다이크와 같은 유명한 학자들, 저희들이 한 15명 정도를 커버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공동연구도 하고 같이 책도 출판해서 보고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효적 지배를 위해서는 동도 서도를 막아서, 축구장 넓이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눈에 보이는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교과부에서 이론적으로 좀 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걸 이철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조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전혁 위원 인천 남동을 출신 조전혁입니다.

제가 차관님한테 여쭙 볼 것은 없고요. 이사장님 잠시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금 사실 독도 관련해 가지고, 저는 연구도 중요하고 세미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저는 또 증거가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들이 주로 민간에서 발굴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 연구자들이 일본의 도서관을 뒤진다든지 해 가지고, 이번에도 사실은 새로운 근대 일본지도 하나 발견된 것 있지요, 신문에 크게 났었는데?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정재정 예, 있습니다.

○조전혁 위원 그것도 사실은 우리 정부 차원에서 발견한 게 아니고 민간 연구자가 발견한 거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정재정 민간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조전혁 위원 물론요, 물론 하고 있는데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영양가 있는 정보가 사실은 민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이런 활동 관련해 가지고 많이 나오더라는 게 제 감인데 이사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정재정** 저희들은 사실은 민간과 뒤에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직접 나서기에 어려운 문제들도 있는 것은 민간이 하고, 실제로는 이번에 신문에 보도된 것은 약간 사실과 다릅니다.

○**조전혁 위원** 그렇습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정재정** 예, 그게 처음 발견된 게 아니고……

○**조전혁 위원** 예, 좋은데요. 왜 요즘 넛지(Nudge) 효과라는 이야기 들어 보셨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정재정** 예.

○**조전혁 위원** 사실은 정부가 나서서 다 하는 것보다, 넛지라는 게 옆구리에서 바짝 쭈시는 것을 넛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조그마한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사실 민간이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파라치 제도들이 많은데 독파라치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독도하고 관련한 우리 영토라는 그런 증거들을 발굴해 오는 민간 연구자들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애국심으로 하지만 조그마한 인센티브, 포상도 굉장히 활발하게 증거를 모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아진 증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전시회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전국에 순회 전시도 하고요, 특히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일본에도 가서 현지 전시를 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정재정** 예, 아주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요. 민간연구자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음으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조전혁 위원** 제 이야기는 연구를, 물론 학술적인 연구도 좋은데 조그만 증거 하나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것으로……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정재정** 잘 알겠습니다.

○**조전혁 위원** 그런 것도 이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눈에 확 띄는 그런 고지도라든지 근대지도라든지 아니면 현대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발굴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유인책을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재원이 모자란 다든지 아니면 해외 전시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재원이 모자란다, 국내 전시를 하는 데 있어서

재원이 모자란다, 사실 지금 이런 문제도 솔직히 있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정재정** 예, 있습니다.

○**조전혁 위원** 교과부 차원에서 좀 지원하실 생각 없습니까? 긴급히 예산 지원할 수도 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전혁 위원**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이사장님께 하나 좀 여쭙어 보겠습니다.

혹시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 같은 것은 없습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정재정** 뒤에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임진왜란 직후에 선조조에 조정에서 한번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마도 사람들이 한국에 귀의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논의를 해서 ‘그 사람들 야만인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끌어안을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한 그러한 기록은 있습니다마는 문헌적으로 언어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이것이 완전히 한국 땅이라고 증명하는 그런 자료 같은 것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방 후에 이승만 대통령도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주장해야 한다’고 한 발언까지 한 적은 있었습니다.

○**조전혁 위원** 그것도 한번 좀 잘 살펴보고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정재정** 예.

○**조전혁 위원** 저쪽에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데 우리도 일종의 맞불 같은 것도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정재정** 예,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재단에서 지난 2월에 세계의 고지도를 모아 가지고 독도와 동해가 한국령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국회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전혁 위원** 저한테는 한 권 안 보내 주시던데……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정재정** 지금 드리겠습니다.

○**조전혁 위원** (웃음)

아닙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정재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걸** 마치셨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황우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우여 위원** 금번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의 검정 부분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첫째는 이것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과서, 다시 말하면 어떠한 판단 능력이나 이성적인 사리분별이 아직 미약한 초등학생들에 대한 주입식 교과서 내용에 독도를 일본령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모든 교과서에 하도록 정부가 나섰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심히 유감과 또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경술국치 100년의 역사적 순간에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그동안에 역사적 야욕과 동북아 평화를 무너뜨린 일본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는 놀라운 어떠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하는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경술국치가 없었다면 독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독도 문제는 어디까지나 역사 문제이지 이것이 더 이상 어떠한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일본이 만든 문제를 일본이 다시 또 제기하고 문제시하고 하는 이러한 악순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민주당 정권이 이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8년도에 중등교과서, 작년에도 고등교과서, 올해는 초등교과서까지 일본 정부가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을 계속한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심각히 받아들이야 될 겁니다.

하토야마 수상은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겠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우리들의 관심을 갖게 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전혀 기대 밖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예의 주시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항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검정 내용은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차관께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이럴 때에는 교과부로서 좀 공격적인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학생들도 교과서를 통하여 독도 문제에 대하여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될 것이고 또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대마도 문제라든

지, 세종 때에 우리가 대마도를 점령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일본의 역사가 한국 역사와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가르칠 것은 분명히 가르쳐야 된다. 특별히 왕실에 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과서도 이제는 분명한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약탈문화재의 목록 같은 것을 학생들이 분명히 주지할 수 있도록 일본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약탈문화재의 현안 같은 것을 학생 때부터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본 학생들과 만나면 이것을 토론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문제를 이번에 우리 입장을 좀 적극적으로 정리해 주시고, 또 동북아역사재단 고생 많이하시고 계신데 독도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것을 하시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거기에 많이 참여시켜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지금 다른 논점이 우리 교육계 비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감사원과 합동으로 교육 비리에 대한 근본적인 하나의 틀을 잡으시는 게 어떨까. 특히 교육감에게 많은 권한이 부여되면서 부패 방지에 대한 우리들의 대응이라 그럴까 혹시 준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었나. 그래서 우리나라는 감사원이 있으니까 그동안에 쌓여 있던 감사원의 여러 가지 정보와 자료 또 그러한 대응 방법이 있을 테니까 교육계 비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대안을 감사원과 함께 공동으로 좀 창의적으로 개척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차체에 교육감들을 처벌하고 비리를 지적하는 것도 좋지만 특히 예방 부분에서 적절한 대응을 공동으로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감사원과 이미 협조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감사원이 죽 축적해 온 그런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저희 교과부가 어떻게 더 대응할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우여 위원** 특히 학교를 건축할 때 많은 문

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방면의 비리에 대해서 감사원이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에서 이 부분을 정리하시면 교육계가 비리를 단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걸** 황우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丁英姬 委員** 미래희망연대 정영희 위원입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교육계 비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사 임용비리부터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 창호공사 수주 그리고 자율형 사립학교 편입학까지 교육 현장은 마치 비리백화점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의 비리 문제는 오죽하면 대통령께서 나서서 ‘대통령인 저부터 회초리를 맞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자책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교과부가 발표한 교육비리 근절 대책의 핵심은 교육감 권한을 분산하고 권한을 넘겨받게 될 교장을 견제하는 장치로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교장공모제를 확대하는 방안 등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죄의식조차 거의 없이 관행적으로 저질러 왔던 교육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교육 현장을 개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관님께서 책임지시고 관련 대책들을 보완하셔서 교육비리가 완전히 척결될 때까지 꾸준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丁英姬 委員** 다음은 장관께서 올해 수능시험부터 EBS 수능강의에서 70% 이상 출제하겠다고 선언하고 난 후 관련 온라인 사교육업체의 주가가 대폭 하락하고 학생들이 EBS에 많은 관심을 갖는 등 지금까지 정부의 사교육비 절감 대책과는 다른 많은 긍정적인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EBS 인터넷 수능강의는 800여 개에 이르는데 이 중에서 70% 출제한다고 하는 것이 수험생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고 학교 수업을 소홀히 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중요한 내용만 간추

리는 또 다른 형태의 틈새 즉 사교육이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교육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학생의 수준에 맞는 수준별 강의를 다양하게 개발하는 등의 정교한 후속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말씀 주신 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EBS는 EBS대로 수준별 수업을 한다든지 또 강사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질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또 학교교육에 있어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EBS와의 연계 강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학교교육에서 다 해결이 되고 그것으로 안 될 경우에 보완하는 차원에서 사교육 없이 EBS만 하면 정말 대학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丁英姬 委員** 또 한 가지는 강의 수가 많은 만큼 비록 교재비가 저렴해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만큼 저소득층 교재구입비 부담 감소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지금 사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재 부분에 부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가격이 일반 교재에 비해서는 20% 정도 저렴하고 또 이번엔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있게 해서 좀더 한 10% 정도 가격이 하락하지만 여전히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저희가 특히 고등학생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무상교재 지원을 좀 조기에 확대하려고 합니다.

○**丁英姬 委員** 잘 알겠어요. EBS에서 출제되지 않는 나머지 30%를 마저 채우기 위해 학원이나 과외 같은 사교육에 여전히 의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사실 EBS만 다 이해하고 잘하면 100% 다 수능에서 문제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직접 연계율은 70%지만 전체적으로 아이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학교교육에서 충분히 다 가능하도록 하고 그게 부족할 경우에는 EBS로만 보완을 하면 사교육 없이도 충분히 수능 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丁英姬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걸** 정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박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보환 위원** 경기도 화성읍의 박보환입니다.
식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차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천안호 침몰사고로 인해 가지고 온 국민이 그 불행을 겪고 있는데 이웃나라 일본에서 사회교과서 독도 영토표기 검정승인을 했더니 참 후안무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 문제 또 독도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 조치는 2년 전 중학교 교과서 지도해설서 파문에 비해서 일본이 독도 공세 수위를 한 단계 더 격상시킨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대한민국 영토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략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정부 측의 입장을 보면 ‘상당히 예상 밖이다. 당황스럽다’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차관님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저희가 3월 말·4월 초에 발표할 것을 예상하고 예의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박보환 위원** 이것이 2006년도 아베 총리 시절이지요. 애국심을 강조하는 교육기본법이 바뀌고 그다음에 2008년·2009년도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가 개정이 되고 했는데, 지도요령하고 해설서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박보환 위원** 이게 출판사가 교과서를 기술할 때 반영하는 정부지침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강제조항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그렇습니다.

○**박보환 위원** 그리고 또 이 해설서에 독도 관련 직접 언급은 초등학교 책에는 없었는데 영토 교육을 강화한다는 내용은 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박보환 위원** 그러면 충분히 예상할 수는 있었던 일이지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박보환 위원** 그런데 지금 교과부에서 대처하는 방법과 능력을 보면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뒷북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교과부 내에 동북아역사대책팀이 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박보환 위원** 그다음에 동북아역사재단에는 독도연구소가 있고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재단이 있습니다.

○**박보환 위원** 그다음에 한국학중앙연구원에도 그 기능이 있고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박보환 위원** 그다음에 총리실에도 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그렇습니다.

○**박보환 위원** 지금 각 기관이 연계는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저희가 나름대로 최대한 연계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박보환 위원**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교과부의 대응방안에 기 추진사항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국내에 관련되는 추진방안인데, 해외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외 외국인들께도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우리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그 관련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보환 위원** 예.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정재정**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외에 대한 작업은 크게 봐서는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당사자인 일본을 상대로 한 활동입니다, 일본을 상대로 한. 다른 하나는 우리를 응원할 수 있는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두 가지 범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일본을 상대로 한 것들은 올해도 일본의 주요 오피니언 리더들을 초청하고 그들과 협의하는 그와 같은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활발히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연구자와 교과서 집필자 그리고 교과서 편집자 이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초청해 가지고 세미나를 열고 우리들의 주장을 전파할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일본의 시민사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마네현이라고 해서 전부 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재단이 후원을 해 가지고 시마네현에서 발행하는 민간신문에 의견 광고를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그 광고를 보고서 시민들이 모여 가지고 한국 측 의견에 동조하는 그러한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시민사회와의 네트워크도 강화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의견에 동조할 수 있는 국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선 첫째는 독도에 관련된 영어책, 불어책 이런 것들을 발행해 가지고 보급할 생각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국제사회에서는 영어로 쓰여진 그러한 책들이 발언권을 갖기 때문에 국내에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한 작업을 할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학자들 그리고 여론 주도층들을 불러 가지고 그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연구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교과서 제작자와 지도 제작자들이 있습니다. 지도 제작자는 특히 영어권하고 스페인어권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지도 제작자들을 불러서 가끔 협의를 하는데 최근에 그 결과가 통보되고 있습니다. 동해로 바꾸어 준다든지 독도와 다케시마를 병기한다든지 이와 같은 개선 자료를 저희들한테 보내 주고 있는 것을 보면 효과가 대단히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또 해외에도 네트워크, 시민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포가 많이 살고 있는 뉴욕이라든지 시드니라든지 워싱턴 등의 교포들을 통해서 그 지역사회의 현지인들과 접촉을 강화하면서 우리들의 독도 영유권을 전파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박보환 위원 이사장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 주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이사장님 답변이 너무 길어 가지고 제가 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걸 예.

○박보환 위원 마무리 하면서 이번에 EBS 70% 반영을 하면서 이것이 꼭 사교육비 절감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차관님께 한 세 가지 정도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과부와 EBS 그다음에 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 비율에만 급급해 하는 듯한데요 수험생들도 EBS 강의만을 쳐다본다면 이는 거꾸로 학교 수업을 좀 등한시하는 풍토로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학생들이 공교육에 대한 소홀함이 없도록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보환 위원 두 번째는 수험생 입장에서 EBS 교재를 안 보면 수능 70%를 포기하는 셈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감을 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EBS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EBS교재 무료 지원 확대라든가 또는 교재비 부담 경감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만성적인 재정난 때문에 EBS가 엄청난 교재 판매 수익금을 재정난 해소에 쓰고 있는 상황인 것 잘 아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박보환 위원 EBS에 걸맞은 합당한 재원 구조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지적해 주신 방향이 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방향들입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보환 위원 예, 차질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걸 박보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권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 서울 노원을의 권영진 위원입니다.

차관님, 일본 초등교과서 검증 결과 발표에 따른 대응 방안을 보면 지난번에 저희가 독도 문제 나왔을 때 그때 했던 것하고 뭐 특별하게 새로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얘기가 번번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대책 세운다고 하지만 또 지나고 나면 흐지부지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선은 올해가 일본이 우리를 강제 합병한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저는 적어도 자민당에서 민주당 정권으로 교체되면 조금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토야마 총리의 발언도 뭔가 이제는

일본이 동북아지역을 넘어서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그런 나라로 탈바꿈하리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하토야마 정부가 당초의 기대보다는 상당히 지지율이 낮습니다. 완전히 선거 전략으로 다시 이렇게 들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민주당 정권도 볼 수 없는 저급한 정권이구나라는 그런 자괴감을 제가 솔직히 갖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한일관계를 굉장히 호의로 대하고 굉장히 조용하게 다루어 나가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일본 내에 있는 정치세력들은 자기 선거에 도움이 되면 극우적인 발언 행태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할 거라는 것을 저희들이 예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의 대책도 지금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뭐 한마디하고 대책 세운다고 할 것이 아니라 아주 지속적으로 그리고 국제 외교전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노력 부분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몇 가지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고 정말 동북아역사재단 그동안 죽 연구했던 것을 보면 동북아역사재단이 생길 때는 독도 문제를 중심으로 생겼는데 그보다 다른 데에 훨씬 더 많은 정열을 쏟아 붓고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그러한 것들이 저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늘 해 봅니다. 이번에는 꼭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라구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늘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대응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민간인을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국정감사 때도 드렸고 했는데 지금 그것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사건이 일어나면서도 민간단체인 반크 같은 경우는 아주 굉장히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크 같은 것에 나오는 것을 보면 벌써 5개 대응 전략을 세워서 1만 명의 어린이 독도대사를 선정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민간단체들을 지원해서 그분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본에 있는 건강하고 양심 있는 보수세력과의 연대 부분들, 아까 말씀하셨던 것도 이제 지속적으로 해 나가십시오.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잠깐 여쭙 볼게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님.

일본이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논리로만 해도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대마도는 대한민국 땅 아닙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정재정 역사학에서 말씀드리면 대마도는 양속관계라는 말을 씁니다. 예를 들면 대마도의 관료들은 사실은 조선왕조의 관직을 받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부산 동래 왜관에 와 가지고 조선정부가 내려준 관복을 입고 임금을 향해서 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봐 가지고 한편으로는 살아남기 위해서 조선에도 속하면서 한편으로는 소위 도쿠가와막부에도 속해 가지고, 그것을 학문적으로는 양속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의식 중에는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지도에는 반드시 대마도와 제주도가 양쪽 발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영역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요새 근대법적인 개념으로 우리 땅이나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고 해서 답답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도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아, 그렇다면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라’는 말씀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권영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대국가 근대법적 개념으로 보면 독도는 명백히 우리 땅인데요, 그렇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정재정 예.

○권영진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시도 때도 없이 일본 땅이라고 접근을 한다면 이것은 다시 하면 독도를 분쟁지역화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연원으로 따지면 대마도는 대한민국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해서 좀더 큰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정재정 대단히 고맙습니다.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민간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들은 음으로는 저희 재단과 거의 다 연결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원을 하고 있고. 이번에 특히 그 반크와는 저

회들이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사이트를 통해서 독도아카데미를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약 1억 30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걸 권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임해규 위원님 마지막 질의이십니다.

○임해규 위원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 독도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의가 있어서 많이 곱치는데요. 저도 그냥 소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결의안을 읽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학교에서 계기교육 하잖아요. 이럴 때야말로 계기교육을 할 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황우여 위원님 말씀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약탈문화재 목록 같은 것을 학생들한테 잘 가르치고 지도를 갖다 놓고 우리나라 어디에 있는 것을 저 사람들이 어떻게 약탈해서 어디 가져갔다 이런 것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아주 중요한 문화재 약탈해 간 것을 신문에서도 난 것을 저도 한번 봤는데 그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부 차원에서 다른 외교부가 할 일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인데 어쨌든 우리는 그런 점의 노력이 집중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안형환 의원께서, 우리 교과위는 아니지만 동료 의원께서 우리나라가 성취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업적에 대해서 얼마 전에 책을 내고 출판기념회를 했는데 제가 그 책을 봤더니 굉장히 잘 쓴 책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역사 중에 굉장히 성취가 있었던 그런 것을 뽑아서 쓴 글이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차관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이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교육계 비리 문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까 이 점도 역시 황우여 위원님 굉장히 좋은 말씀을 주셨

는데 저도 비슷한 얘기라서 그렇기는 한데요. 감사원과 공동 대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특별히 지금 교육계에 큰 비리의 어떤 냄새를 피우는 것은 결국은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 된다고 하는, 그곳이 뭔가 조달청을 통해서 큰 공사가 오가는 곳 아니겠습니까, 조달청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 교과부에서 나온 것은 1000만 원 짜리 수의계약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것은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일어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큰 도둑을 잡아야 문화적으로 도둑이 근처에도 오지 않는 깨끗한 학교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곳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뿌리를 잘 다스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구요.

마지막으로 EBS 수능시험 70% 연계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고민이 들어요. 아까 존경하는 정영희 위원님도 그 말씀 주셨고 이군현 위원님도 그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내신을 강화하겠다고 국가가 대학입시시험에 대해서 그렇게 개입하면 시장이 움직이고 그래서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이 또 그쪽으로 쏠리고 그래서 그것을 점수를 등급화하느냐, 원점수를 주느냐 이런 것 가지고 국가가 씨름을 하고 이런 게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수능하고 내신하고 소위 말하는 대학본고사 논술이라고 하는 것을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것은 그 3개가 각각 평가받는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평가하는 내용이 각각 제각기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고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은 하나인데 평가는 세 군데서 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트라이앵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그 한 가지가 그냥 잘 평가되면 되는 건데 변별력이 떨어지는 이유인지 무슨 이유인지 세 군데서 세 가지 평가도구로 세 가지를 하니까 각각의 시장이 형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은 그런 점에 민감하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좀 잘해야 되면 수능이라고 하는 것을 EBS가 하니까 사교육 부담을 덜어준다 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 한 가지이기는 하지요. 그것도 한 가지이기는 한데 저는 그 느낌이 어떻게 반영하면 70%가 되고 어떻게 반영하면 50%가 되는

지 그것도 사실 논리적으로 납득시키기도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원에 안 가고 EBS를 많이 들으면 대체됩니다’라는 효과는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그 수능이 출제하는 방식과 또 학교에서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 또 공부하는 방식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보다 근본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많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수능을 학력고사화하자든지 또는 수능을 통합교과로 문제를 내는데 학교에서는 교과가 아주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교과를 통합화하자든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그간에 있었는데 한 걸음 두 걸음 잘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루 이틀에 될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교과부가 방향은 어차피 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해야 되는 문제이고 장기적인 과제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 즈음에 잊어먹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교과를 통합해서 수능하고 그 범위나 이런 것들을 일치시키도록 하는 근본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해 놓고자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특히 수능에 관련된 임해규 위원님 제안을 굉장히 탁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수능 개편을 위한 연구회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아마 빠르면 4월에 결과가 나오는데 그 개편의 큰 방향도 오늘 주신 말씀이 아주 중요한 방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핵심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그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주신 독도 문제라든지 비리 문제에 대해 주신 말씀도 저희가 지금 그쪽으로 추진 방향으로 즉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걸** 임해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질의는 다 끝났는데요, 보충질의 하실 분이 두 분 계십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전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조전혁 위원** 인천 남동을 출신 조전혁입니다.

차관님, 아이들 이런 농담이 있다는데 혹시 들어 보셨나요? ‘수능 1점이면 애인의 외모가 달라진다’ 그런 비슷한 농담들 많이 있는 것 아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조전혁 위원** 그런데 이 사교육도 사실 상당히 높습니다.

차관님, 경제학자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조전혁 위원** 저도 경제학자입니다.

가격이 왜 높아집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수급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전혁 위원** 수급도 있고요.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수능 1점의 한계효용이랄까요, 아니면 한계생산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교육비 대책은 수능 1점의 한계생산성이나 한계효용을 낮춰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좋은 대학들이 많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여태까지 대학 지원을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연구중심대학 쪽에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죽 보면 최근 들어와서 굉장히 성장한 대학 중에 차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동대학 같은 게 훌륭한 모델 아닙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조전혁 위원** 그런 학교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예를 들면 이게 휴머니티 칼리지 이런 개념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작지만 강한 대학들, 옛날에 서강대학 같은 경우가 성장할 때, 외대가 성장할 때 이런 대학들을 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면 수능 1점의 한계효용이랄까 한계생산성을 좀 낮출 수 있고 전반적으로는 사교육비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동감을 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특히 대학의 질을 많이 높여서 좋은 대학을 많이 만드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교육을 줄이는 큰 방향이라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작지만 잘 가르치는 대학 지원도 저희가 최근에 10개 학부대학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지방대학들이 상당히 발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지방의 거점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국립대학들의 법인화 추진도 지금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전혁 위원** 이것은 여담으로 좀 말씀드리는데요. 어떤 대학에서 교수가 다른 대학으로 옮기

려고 그래 가지고, 이미 옮겨 갔어요. 그런데 전
번에 있던 대학에서 사직서를 안 끊어 줘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거의 그냥 교수를 괴롭히기
위해 가지고 안 끊어 주고 있는데, 대학명을 밝
힐까요? 수원여자대학이라고 그러니까. 그것 차
관님이 한번 살펴보고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조전혁 위원**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작년
에도 모 대학 교수가 옮겨 가는데 그런 식으로
애를 먹이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게다가 그전에 이 여자교수에 대해서 횡령 혐
의로 고발을 했는데 검찰에서는 전혀 사실무근으
로 드러났고요.

사람을 저렇게 골탕먹이고 그래서 대학이 되겠
습니까? 그것은 좀 확실히 챙겨 주십시오.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그렇게 하겠습
니다.

○**조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걸** 조전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
니다.

다음으로는 권영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
오.

○**권영진 위원** 시간이 좀 지났지만 교육비리 근
절대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오늘 교과부가 보고한 데 보면 전에 발표할 때
는 재산등록 의무 공무원 범위 확대 이런 게 발
표된 것 같았는데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것은 안 하기로 한 겁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아닙니다. 7쪽
의 4번 보시면 ‘교장·인사담당장학관 재산등록
제 도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권영진 위원**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 좀 부족
하지 않나요?

제가 최근에 어떻게 보면 확산되고 있는 교육
비리 유형이나 이런 것을 보면 교장과 인사담당
장학관 이외에도 실제로 현장에 가면 인사 업무
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장학사 그리고 학교
회계 출납을 담당하는 행정실장 이런 쪽으로까지
도 광범위하게 돼 있고 오히려 그 연결고리는 밝
혀지기가 참 어려워져서 그렇지 그것이 많다는 게
일반적인 얘기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여쭙 보
면.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재산등록 의무 공무원

범위를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
게 생각하세요, 차관님?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이 부분은 주
관부처가 행정안전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업
무가. 그래서 교장·인사담당장학관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중이
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 같이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하는 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 저
는 그분들을 위해서도 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학교회계 관련 법령에 학교청렴
계약제 규정을 포함하는 것이 대책 중의 하나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공립학교 회계규칙을 바꾸
겠다는 겁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그렇습니
다.

○**권영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문제가 드러날
경우에 계약 해지, 취소, 그다음에 일정기간 동안
에 입찰 참가 제한 이런 게 다 들어갑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들어가 있
습니다.

○**권영진 위원** 그런데 이게 규칙을 바꾸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국
민기본권에 속하는 경우인데 헌법에 국민기본권
과 관련된 사항은 법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법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
까? 규칙을 바꾸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그 관계는 담
당 국장께서 잠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제 단장께서 잠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교육비리근절및제도개선추진단
장 성삼제** 교육비리근절및제도개선추진단장 성
삼제입니다.

현재 청렴제는 약관에 붙여서 대부분 많은 기
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령이
아니라 예규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학교회계규칙은 모법이 초·중등교육법이고 초·
중등교육법에 근거해서 국립 및 교육청 회계규칙
이기 때문에 회계규칙에 청렴계약 사항이 들어간
다 하더라도 법령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영진 위원** 그래요?

○**교육과학기술부교육비리근절및제도개선추진단**

장 성삼제 예.

○**권영진 위원** 법으로 정하는 게 더 강력한 통제, 그런 규정이 되지 않을까요?

○**교육과학기술부교육비리근절및제도개선추진단 장 성삼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학교하고 다릅니다.

○**권영진 위원** 그래요?

○**교육과학기술부교육비리근절및제도개선추진단 장 성삼제** 교육청이나 일반 국가 같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야 되지만 학교는 학교회계규칙에 들어가는 것으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권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위학교별로 분산되어 있는 행정업무요, 지난번에 지역교육청 단위를 지원기관으로 개편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게 지금 유야무야된 상태인데요. 학교 단위의 행정업무를 지역교육청 단위로 좀 통합을 해 주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게 교육비리 근절을 넘어서서 학교의 행정업무의 축소라든지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지금 교육비리 근절 문제와 연관해서 검토를 다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저희가 지금 교육청 기능 개편은 범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강한 강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은 학교 단독으로 하기 힘든 기능을 묶어서 교육청 기능 개편과 연계해서 한번 검토해 보라는 말씀인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사실 교육비리는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정말 MB정부 들어와서 교육비리 근절이라는 칼을 빼 드니까 이게 우후죽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구조적으로 교육비리가 나타날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해 주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게 정말 묵묵히 아이들 가르치는 데 열성을 보여 주시는 선생님들의 명예와도 관련이 돼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교장선생님들 고개를 들고 다니시지를 못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 교육의 질, 교육의 수준 향상, 교육자들의 자존심 문제를 위해서도 교육비리 문제는 정말 차제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예요. 이것을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논의해서 그때마다 이렇게 대책 내놓을 게 아니라 정말 교육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를 어디 용역을 주시든지 해서 좀 종합적으로 깊이 심도 있게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차관님 보시기에…… 저는 물론 직선제가 부패를 키우는 원인이라고 보지 않지만 지금 현재와 같은 교육감직선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계의 비리를 양산하는 온상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교과부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완전히 성역인 것처럼 건드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현행 교육감제도…… 교육감도 인사제도의 하나인데, 이게 선출로 뽑는 건데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저희가 이번 비리대책은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정말 이번 기회에 가장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한번 고쳐 보자 하는 생각으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권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지적하신 교육감 선거제도의 경우에는 지난 17대 때 법 개정 이후에 처음 이번에 직선을 하는 거라서 정부 차원에서는 국회를 존중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한 이후에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의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모든 것을 다 열어 놓고 가장 근본적인 대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4대 지방선거와 동시선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이미 교육감선거는 그동안 여러 곳에서 시행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울교육감부터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감방 가고 그리고 제가 국정감사 때 일부만 공개했지만 교육감선거 할 때 교원들 줄 세우기 해서 인사파행 나타나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 부분을 또 지금 이번 지방선거 지켜보고 그때 가서 하겠다는 것은 저는 지금 터져 나오는 이 교육비리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이나 불만 그리고 분노와 비교하면 교과부가 너무 느긋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하여튼 말씀 주신 대로 교육감선거 직선 문제도 저희가 이번…… 이제 어차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분석을 해서 최대한 근본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차관님 믿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걸** 권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혈레벌떡 달려오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숨 좀 돌리시고요.

위원장으로서도 한 말씀 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본에서 이런 일들이 거의 정기적으로 빈발하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민주당 정부라는 데 약간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보통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사후약방문적인, 평소에 준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동북아역사재단 정재정 이사장님, 예를 들어 독도연구소가 있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정재정**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걸** 평소에 그래도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관리하는, 독도 문제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의 본격적인 연구소인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한 위상과 인력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일본에 이런 독도 문제와 서로 연합할 수 있는 양심적인 시민단체에 대한 파악이 돼 있습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정재정**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걸** 그것까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정재정** 저희들 독도연구소는 올해 2010년도 예산이 약 27억 정도 됩니다. 작년보다 3억 정도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하고 직원이 1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세력들은 어린이와교과서전국네트21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저희들하고는 항상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고 또 각 지역마다 그런 조직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일본 신문에 우리들의 의견을 광고를 낸다든지 할 때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 교과서 분석이라든지 또는 채택 저지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측 시민단체와 일본 측 시민단체가 연계해 가지고 그와 같은 활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걸** 감사합니다.

박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英娥 委員** 송과갑 출신 박영아 위원입니다.

이렇게 독도영유권 문제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관님께서는 이 독도가 일본 측에서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했던 것이 최근에 있어서 언제부터라고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2004년 이후라고 말씀하십시오.

○**朴英娥 委員** 그러면 왜 지금…… 일본 제국주의가 연합군한테 패전을 선언한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해서 생겼고 한 50년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답변 좀 하시지요.

○**朴英娥 委員** 간단히 말씀하시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정재정** 제가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걸** 나와서 마이크를 쓰십시오.

○**朴英娥 委員** 그러시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정재정** 아주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일본에서는 최근에 애국주의 교육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2006년에 일본이 패전한 이후 처음으로 교육기본법이라는 것을 개정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에 관한 헌법이라고 일본에서는 아주 신성하게 생각했던 법이었는데 그 법을 개정하면서 자기 나라의 전통문화와 향토를 사랑하는 마음을 강조하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바뀌게 되니까 따라서 학습지도요령이라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교육과정입니다. 각 교과목의 목표와 학습 내용을 규정하는 것인데, 거기에 그런 것들이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설서에도 들어가고. 그런 추세가 죽 지속되고 있습니다.

○**朴英娥 委員**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것은 기술적인 과정이고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2002년도에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초등학교 교과서 5종을 검정하면서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선을 그어서 지금 독도가 완전히, 독도를 포함한 공해수역이 일본

땅인 것처럼 표기된 것 아시지요, 차관님께서?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朴英娥 委員**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인식하고 계신지요, 차관님?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朴英娥 委員**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말씀 주시지요.

○**朴英娥 委員**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서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김대중 정권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경제적 고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켰으므로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스스로 포기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본에서 그 협정을 믿고 그런 식으로 학교교육법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쪽에서 다시 한번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할 정치적 근거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2002년 이후에 보면 처음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일본 고교 지리교과서에 등장한 이후에 2005년에는 중학교 지리교과서에 등장을 했고, 드디어 2010년에는 초등학교 교과서까지 가 가지고 일본의 자라나는 전 세대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무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스스로 체결한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킨 것이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8년 동안 계속 같은 과정을 거쳐 왔어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국회에서 촉구하고, 정부가 선언하고, 일본대사 불러다 항의하고, 그리고 독도연구소라든가 이런 것을 세워 가지고 어느 정도 역사적·실체적 사실을 수집하고 연구했지만 근본적인 것을 바꾸지 않으면 일본이 저런 식으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자국민한테 교육하고 그다음에 외국에 나가서 국제사회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각도로 로비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막을 명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한일어업협정이 3년마다 자동 갱신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이 협정을 파기하고 정말 독도를 우리 땅으로 포함시키는 그러한 새로운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차관님 오늘 처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입장을 제가 전달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그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답변드릴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朴英娥 委員** 아니, 이게 서면으로 제출할…… 얼마나 긴급한 문제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무슨 몇 년 해야 한 번씩, 일본측에서 이렇게 한 스텝 한 스텝 갈 때마다 우리 정부는 똑같은 대응을 내놓고 해서 될 게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제 말씀은 우리 최고 통수권자이시고 우리 영토를 관할하시는 우리나라의 대통령님께 이것을 보고하셔 가지고 이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말 정부 차원에서 외교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朴英娥 委員** 그 부분에 있어서 검토하시고.

저한테 지금 보고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영토의 수호자를 대표하시는 대통령님께 이 부분을 정말 직언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체결 파기를 제가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검토를 하시고 나서 본 위원한테 일단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英娥 委員** 그리고 또 오늘 사실 지난 몇 달 동안 저희 교과위원으로서 머리를 들 수 없을 정도로 교육계의 비리가 생겼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짧게는 지난 몇 년 전부터 실시된 교육감선거 직선이 야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지난 국감에서 교육계의 문제 중에서 하나가 인사 문제라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과부 국감을 할 때 교육과학기술부의 인사구조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 마치 이번의 서울시교육청의 인사 문제가 전문직 교사가 있고 장학관이 있고 이분들이 교육청에서

일하다가 다시 또 현장의 교감이나 교장으로 내려오시고 이런 순환구조의 문제점이 결국은 이러한 인사비리를 만들었는데, 교과부의 인사구조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차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이 부분은 장관님께서도 관훈토론에서 특히 교과부의 순환근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장관님이 해외출장 다녀오시는 대로 아마 빠르면 다음 주 내에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英娥 委員** 그런데 제가 유감스러운 부분은 제가 지난 10월 국감에 공무원들 3급 4급 5급 7급 해 가지고 소위 피라미드형이 아니라 마름모꼴의 이상한 인사구조를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통계자료에 근거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지금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 하지 않으셨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아니, 저희가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방안을 즉 부내 토론이라든지 전문가들 용역 등을 통해 가지고 마련을 해왔고요, 지금 곧 정책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朴英娥 委員** 아니, 반복되는 말씀인데, 제 말씀은 국감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냥 6개월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시다가 비로소 2월에 서울시교육청 비리가 터지니까 이렇게 뒤늦게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시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하여튼 저희가 교과부의 인사 부분도 필요한 경우에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는 입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곧 정책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英娥 委員** 그리고 오늘 수능을 EBS랑 연계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지난 한 달 전부터 정부가 발표했고 오늘도 현안질의에서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사교육을 잡기 위해서 또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EBS라고 하는 방송강의를 70% 이상 직접 연계하겠다 이러한 것이 우리 교육의 발전에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앞에서 존경하는 임해규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수능의 성격이 바뀌어야 된다 하는 그

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학교교육과는 별개의 시험으로 해서 더 많은 부담을 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해소되어야 된다는 지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수능으로 인한 지나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수능체제 개편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수능 준비를 위해서 별도의 학원을 다니거나 이럴 필요없이 가능하면 학교 수업으로 다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EBS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朴英娥 委員** 차관님, 불시에 고3 교실을 한번 시찰해 보십시오. 어떻게 공부하는지 보셨습니까, 한번?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朴英娥 委員** 불시에 한번 가서 어떤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지 보셨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朴英娥 委員** 제가 그것을 꼭 하기를 권합니다.

가 보시면 2교시 중의 한 시간 정도는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교과서 가지고……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떠한 것을 어떤 학년에 배워야 되고, 그 교육과정의 내용은 우리가 만약에 1주일에 한 3시간 정도 수업한다면 3시간 정도의 수업시간에 충분한 내용을 전달하고 토론해 가지고 교육의 기본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것으로 교육과정이 짜여 있는데, 지금 우리 교육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고3 교실에서 수능 문제집을 가지고 풀고 있습니다,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가 EBS 강의를 가지고 수능 문제에 70% 연계하겠다 그러면 그게 해결이 됩니까? 결국은 EBS 문제집을 가지고 고등학교, 특히 고3 교실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것을 정부가 나서 가지고 EBS 수능교재든 또 다른 어떤 출판사가 낸 수능을 위한 문제집이든 그것을 가지고 정부가 EBS로만 하기 때문에 부담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수능 학습이라고 하는 게요……

제가 물리를 전공했지만 수능 문제 풀어 보면 한 70% 맞으면 잘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전문가들도요 본인 분야의 과목 풀어 보면, 국어교수 언어 문제 70점 맞으

면 잘 맞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그게 학교의 교육과정하고 상당히 별개로 동떨어진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朴英娥 委員** 아닙니다. 교육과정하고 잘 연계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그 주어진 시간 안에 만점 받기가 전문가들도 힘듭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하는 공부는 뭐냐 하면 반복학습입니다.

그래서 최우수권, 상위 3% 학생조차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라도 안 틀리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게 현재의 수능 체제예요. 그것이 EBS 교재를 하든 EBS에서 70%가 나오든 뭐가 변하겠습니까?

우리가 당장 단기적으로 EBS로 국한되니까 교재비도 줄어 들고 학원도 혹시 좀 덜 갈 수 있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교육을 근시안적으로 보는 대증요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을 마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히 정부에서 해야 될 것은 그야말로 정말 진부한 표현이지만 공교육을 바로잡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중요합니까? 가르치는 교사가 제대로 가르치셔야 돼요. 능력 있는 교사가 들어와서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학생은 그것을 배우고 그것의 응용으로서 어떤 시험 문제를 풀든 간에 그것은 나중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교육에서, 시험 문제집을 가지고 정부가 나서 가지고서 이것 가지고서 70% 낼 테니까 그거면 사교육 줄어든다고 하는 게 얼마나…… 전 세계에 내놓아서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거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그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영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상당히 근본적인 수능의 문제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능개편연구회에서 지금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빠르면 4월 중에 개편 방안에 대해 일단 공론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수능이 말씀하신 대로 지나치게 아이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고 또 아이들의 학력이나 창의력 향상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또 수능이 한편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수능 준비를 위한 사교육 부담이 굉장히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우리 EBS 수능 연계 70%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개편 방안과 당장 사교육을 유발하는 그 2개를 다 같이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朴英娥 委員** 여러 가지 교육지책인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요 수능개편위원회가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제 경험상으로. 제가 15년 동안 수능이 여러 가지로 매년 변하는 과정을 지켜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내신은 반복학습이 아닙니까? 그것은 더합니다. 더 좁은 내용으로 정말 달달달달 외워서 하나 틀리지 않기 위한 공부를 더 깊이 없이 하는 겁니다, 수능보다 오히려 더.

그 현실은 지금 교과부에서 직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수능이 단편적인 지식을 묻는 것이니까 수능의 부담을 경감시키겠다, 제가 말씀하는 것은 학교의 내신은 더합니다. 그러면 학교 내신 반영률을 없애야 돼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 말씀은 어려운 문제예요, 모두 해결하기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우리 교육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마는……

○**朴英娥 委員** 그런데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게 우리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방향을 거꾸로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거꾸로가 아니고요, 저희 정부가 근본적인 처방도 많이 고민해서 지금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과정에서도 창의·인성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또 박영아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교육과정을 개편한다든지 또 교사들의 수업 방식을 바꾼다든지 이런 쪽도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수능체제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지금 개선하는 방안이 진행 중이고, 그런 근본적인 개편 방안과 동시에 사교육 부담은 워낙 지금 현재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수능의 EBS 연계 70%라는 정책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朴英娥 委員** 한 마디만 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니다.

우리가 마음이 급하고 대통령께서도 급하고, 교과부에서도 급해 가지고 사교육을 잡고 사교육비 줄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저는 당장 사교육비 안 준다고 확신합니다. 5%도 줄일 수 없어요. 실제로 작년에 못 줄였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차피 그러면 학교교육이 뭐가 부족해서 자기가…… 사교육의 비용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들이 정규 수업 시간이 끝난 다음에도 다시 교육과정의 반복학습에 매달리고 있는 현실이 잘못되었지만, 그렇지만 어차피 우리나라 학생들 너무 많이 공부하는 게 탈이거든요, 공부시간이 많은 게. 그 많은 시간을 공부할 때 의미 있는 공부를 하도록 정부가 유도하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또다시 더 의미 없는 공부를 하도록 'EBS라고 하는 150개 종의 문제집, 거기에서 수능 문제 낼 테니까 너희들 이것 가지고 반복학습해서 모든 학교 수업시간, 여타의 시간을 거기다 투자하라' 이것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교과부 입장도 있지만 근본적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재고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저희가 근본적인 대책은 항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진하면서 또 EBS 70% 연계를 통한 사교육 경감대책도 동시에 같이 병행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朴英娥 委員** 저는 그게 잘못된 정책이라고 제가 지금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같이 병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부가 앞장서 가지고 더 나쁜 쪽으로 몰고 가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걸** 박영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추가질의입니까?

○**조전혁 위원** 예.

○**위원장 이종걸** 조전혁 위원님 요약해서 해 주십시오.

○**조전혁 위원** 두 가지만 간단히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 비리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대학 총장 선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비리 덩

어리입니다. 반드시 하여튼 살펴봐 주시고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조전혁 위원** 총장 나간 사람이 심지어 교수들 해외 골프까지 데리고 간답니다. 그거는 금방, 제가 보기에는 교수 사회의 여론을 들어 보면 알 수 있고요. 국공립 대학부터 해 가지고 하여튼 이것은 발본색원해서 뿌리 뽑아 주시고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조전혁 위원** 그리고 공사 브로커 얘기 들어 봤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조전혁 위원**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공사 브로커가 온답니다, 교육청 관련해 가지고. 와서 '이번에 복합 무슨 시설 지어 줄 테니까 신청하세요'…… 나머지는 그 브로커가 다 해 준답니다. 그 비리 구조 파헤치면 제가 보기에는 공사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밝힐 수 있을 겁니다.

그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걸** 조전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 현안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존경하는 김선동 위원님 그리고 김영진 위원님, 김춘진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차관님을 비롯한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님,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산회)

○출석 위원(17인)

권영길	권영진	김영진	김세연
김진표	김춘진	박보환	안민석
이균현	이상민	이종걸	이철우
임해규	정두언	조전혁	최재성
황우여			

○청가 위원(1인)

최재성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노재석
전문위원	이진호
전문위원	이용원

○정부측 및 기타참석자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이주호
기획조정실장	김차동
인재정책실장	최수태
감사관	박준모
학교지원국장	이시우
학교자율화추진관	이원근
교육복지국장	이상진
평생직업교육국장	김규태
교육비리근절및제도개선추진단장	성삼제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정재정

【보고사항】

○의안 회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 발의)

(2010. 1. 27 최재성·권영길·전병헌·신학용·이찬열·백원우·김영진·강기정·김춘진·안민석·최영희·최규식·유원일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 발의)

(2010. 1. 27 최재성·권영길·전병헌·신학용·이찬열·백원우·김영진·강기정·김춘진·안민석·최영희·최규식·유원일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28일 회부됨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 발의)

(2010. 1. 29 이철우·고승덕·김성태·김세연·김태환·서상기·정두언·정수성·정해결·조전혁 의원 발의)

2월 1일 회부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 발의)

(2010. 2. 1 백재현·강창일·박영선·조경태·임영호·최영희·김효석·이찬열·송영길·김춘진·김영진·박은수·곽정숙·신학용·조영택·전병헌·김재윤·김진표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 의원 대표

발의)

(2010. 2. 1 손숙미·박대해·김소남·조진래·김을동·김정권·김효재·원희룡·임두성·유재중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2일 회부됨

학교사회복지법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2010. 2. 4 이주영·이상민·우윤근·장운석·주성영·손범규·홍일표·노철래·박영선·박지원 의원 발의)

2월 5일 회부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화수 의원 대표 발의)

(2010. 2. 8 이화수·신학용·김성태·김재윤·이춘식·정해결·한선교·김우남·박준선·정갑윤·신성범·이사철·이계진·원유철·정진섭·송훈석 의원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 발의)

(2010. 2. 8 권영진·신성범·이인기·권택기·안홍준·김성태·이성현·김정훈·최구식·조전혁·황영철·정두언 의원 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 발의)

(2010. 2. 8 권영진·신성범·이인기·권택기·김성태·이성현·조전혁·황영철·정두언·이해봉 의원 발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2010. 2. 8 권영진·신성범·이인기·권택기·안홍준·김성태·이성현·김정훈·최구식·조전혁·황영철·정두언·이해봉 의원 발의)

이상 4건 2월 9일 회부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 발의)

(2010. 2. 9 권영진·신성범·이인기·권택기·안홍준·김성태·이성현·김정훈·조전혁·황영철·정두언 의원 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 발의)

(2010. 2. 9 권영진·신성범·이인기·권택기·안홍준·김성태·이성현·김정훈·조전혁·황영철·정두언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10일 회부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

(김효석 의원 대표발의)

(2010. 2. 12 김효석·백재현·양승조·장세환·
변재일·안민석·박기춘·송민순·김충조·
서갑원 의원 발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효석 의원 대표발의)

(2010. 2. 12 김효석·백재현·양승조·장세환·
변재일·안민석·박기춘·송민순·김충조·
서갑원 의원 발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 의원 대표발의)

(2010. 2. 12 김선동·유성엽·김재경·유승민·
권성동·이한성·유기준·김부겸·김태원·
홍정욱·손숙미·현기환·송영선·신성범·
박상돈·최인기·이성현·이인기·이정현·
김성태·김정권·김정훈·김성희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16일 회부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아 의원 대표발의)

(2010. 2. 19 박영아·서상기·김세연·정두연·
조전혁·이성현·김효재·김정훈·손숙미·
이경제·조문환·배은희 의원 발의)
2월 22일 회부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10. 2. 23 정부 제출)
이상 2건 2월 24일 회부됨

**고등교육장학재정교부금법안(신학용 의원 대표
발의)**

(2010. 2. 25 신학용·이윤석·이두아·김동철·
김성수·박선숙·임영호·김재운·김우남·
강창일 의원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 의원 대표발의)

(2010. 2. 25 김정·김학송·권영세·진영·
유승민·김성식·김옥이·심대평·이진삼·
정의화·정하균·이성현·원유철·노철래·
황진하·김성곤·이한성·서상기·이윤성·
최연희·윤상일·김혜성·유성엽·권성동·
이용경·김장수·원희룡·오제세·송민순·
박진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26일 회부됨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박보환 의원 대표
발의)**

(2010. 2. 26 박보환·이한성·조전혁·황우여·
박은수·구상찬·정영희·정갑윤 의원 발의)
3월 2일 회부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영희 의원 대표발의)**

(2010. 3. 2 정영희·심대평·조경태·송영선·
임영호·노철래·유정현·임해규·윤상일·
박보환·조전혁·허천·김정·정해걸·
김혜성·안민석·김용구·김춘진·황우여·
김영진 의원 발의)

3월 3일 회부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수 의원
대표발의)**

(2010. 3. 3 조승수·강기갑·곽정숙·권영길·
김상희·김영진·오제세·유원일·최문순·
최영희·홍희덕 의원 발의)

3월 4일 회부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성 의원 대표발의)

(2010. 3. 5 최재성·최영희·김영록·김부겸·
김영진·이찬열·김동철·박은수·박기춘·
김재균·오제세·백원우·김춘진·최문순·
조승수·송영길·신학용·강기정·조경태·
이춘석·권영길·안민석·서종표·강기갑·
김우남·김성순·서갑원·신건·이명수·
강창일·이정희·박선숙 의원 발의)

3월 8일 회부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
발의)**

(2010. 3. 11 김세연·유기준·신학용·이종혁·
이명수·조경태·이해봉·이성현·김태원·
강용석·정해걸·홍영표·김성태·주광덕·
이계진·황우여·박보환·이한성·정갑윤·
김금래·이정선·이인기·김무성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
발의)**

(2010. 3. 11 김세연·유기준·허원제·유승민·
유성엽·이한성·배영식·황영철·강용석·
정해걸·김성태·박보환·정갑윤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12일 회부됨

원자력법 전부개정법률안(권영길 의원 대표발의)

(2010. 3. 16 권영길·최재성·이정희·곽정숙·
홍희덕·강기갑·김영진·유성엽·이찬열·
최문순 의원 발의)

원자력안전법안(권영길 의원 대표발의)

(2010. 3. 16 권영길·최재성·이정희·곽정숙·
홍희덕·강기갑·김영진·유성엽·이찬열·
최문순 의원 발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권영길 의원 대표발의)

(2010. 3. 16 권영길 · 최재성 · 이정희 ·곽정숙 · 홍희덕 · 강기갑 · 김영진 · 유성엽 · 이찬열 · 최문순 의원 발의)

이상 3건 3월 17일 회부됨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010. 3. 17 이종걸 · 안민석 · 양승조 · 조승수 · 최문순 · 이정희 · 백재현 · 김부겸 · 최규식 · 권영길 · 김춘진 · 최규성 · 김영진 · 김재균 · 정동영 · 천정배 · 이춘석 · 최철국 의원 발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

(2010. 3. 17 박순자 · 이종혁 · 서상기 · 조원진 · 김성수 · 노철래 · 이한성 · 박보환 · 김효재 · 이명규 · 이학재 의원 발의)

이상 2건 회부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 의원 대표발의)

(2010. 3. 18 김을동 · 박은수 · 홍영표 · 홍사덕 · 홍희덕 · 이한성 · 이명수 · 김효재 · 김재윤 · 한선교 · 이해봉 · 정수성 · 오제세 · 유성엽 · 신영수 · 원희룡 · 김창수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 의원 대표발의)

(2010. 3. 18 김을동 · 박은수 · 홍영표 · 홍사덕 · 홍희덕 · 이한성 · 이명수 · 김효재 · 김재윤 · 한선교 · 이해봉 · 정수성 · 오제세 · 유성엽 · 신영수 · 서갑원 · 원희룡 · 김창수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19일 회부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금래 의원 대표발의)

(2010. 3. 19 김금래 · 김세연 · 박은수 · 신낙균 · 신영수 · 안홍준 · 원희룡 · 원희목 · 유정현 · 이두아 · 이인기 · 이한성 · 이해봉 · 조영택 · 한선교 · 허원제 · 홍영표 · 홍정욱 · 홍희덕 · 황우여 의원 발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

(2010. 3. 19 강기정 · 김우남 · 김재균 · 이미경 · 김동철 · 안민석 · 변재일 · 최규식 · 이석현 · 양승조 · 김유정 · 최철국 · 백원우 · 백재현 · 강창일 · 서갑원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22일 회부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10. 3. 22 김춘진 · 최재성 · 안민석 · 김영진 · 이종걸 · 문학진 · 조경태 · 백재현 · 변재일 · 원혜영 · 이용경 의원 발의)

3월 23일 회부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승덕 의원 대표발의)

(2010. 3. 25 고승덕 · 이한성 · 이정선 · 조진래 · 박대해 · 이사철 · 송민순 · 이해훈 · 강명순 · 권영세 · 장광근 의원 발의)

3월 26일 회부됨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시종 의원 대표발의)

(2010. 3. 26 이시종 · 최재성 · 우윤근 · 우제창 · 김우남 · 신학용 · 박선숙 · 유성엽 · 김성곤 · 오제세 · 서갑원 · 최문순 · 홍재형 · 주승용 · 김춘진 · 김동철 · 이찬열 · 노영민 · 조영택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손범규 의원 대표발의)

(2010. 3. 26 손범규 · 김정권 · 유기준 · 이한성 · 김태원 · 이해봉 · 임해규 · 이명수 · 신지호 · 홍희덕 · 이성현 · 유성엽 · 한선교 · 이두아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29일 회부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 의원 대표발의)

(2010. 3. 30 김을동 · 이한성 · 유기준 · 안형환 · 홍희덕 · 정수성 · 유성엽 · 이명수 · 정의화 · 김성희 · 김무성 의원 발의)

3월 31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지식재산기본법안(이종혁 의원 대표발의)

(2009. 11. 4 이종혁 · 주광덕 · 안경률 · 조해진 · 원희목 · 나성린 · 이두아 · 김기현 · 박준선 · 허천 · 강명순 · 김성조 · 안상수 · 배영식 · 정태근 · 김세연 · 김성희 · 김성태 · 조진혁 · 현기환 · 홍준표 · 정갑윤 · 정양석 · 김영우 · 배은희 · 고흥길 · 이철우 · 이정선 · 원희룡 · 이윤성 · 정진섭 · 최철국 · 김춘진 · 양승조 · 이인기 · 백성운 · 김광림 · 황진하 · 홍사덕 · 김성수 · 정옥임 · 안홍준 · 안효대 · 강성천 · 김효재 · 박대해 · 이화수 · 이춘식 · 박순자 · 유정복 · 구상찬 · 임해규 · 이성현 · 이계

진·현경병·김재경·권경석·조윤선·서병수·박종근·김선동·고승덕·김용태·강승규·손숙미·강길부·전여옥·신영수·박상은·권영세·이명규·허태열·정몽준·최연희·여상규·조정식·김학용·안규백·심재철·신지호·손범규·강석호·박보환·장제원·김동성·진성호·나경원·주성영·유일호·이해봉·김무성·김학송·이정현·유승민·김옥이·김충환·김태환·임동규·유성엽·박민식·김정권·김정훈 의원 발의)

2010년 2월 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우주기상업무법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

(2010. 2. 26 조원진·김성태·김정권·박준선·유기준·이명규·이사철·이진복·이한성·이해봉·한선교·홍희덕·황우여 의원 발의)

3월 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2010. 3. 22 이상민·안민석·권선택·박선영·임영호·류근찬·이명수·김창수·변웅전·이용희 의원 발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2010. 3. 23 정부 제출)

이상 2건 3월 2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청원 회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10. 3. 3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연대 임종대로부터 안민석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

3월 4일 회부됨